

여성으로 육영수(전체 6위),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명훈(12위), 대중가수 서태지(5위), 야구선수 박찬호(18위), 특히 겨우 한달 남짓된 프로골프 스타 박세리(10위)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50년을 만든 50인'은 아니다.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고 보자는 조선일보의 너무나도 상업적인 계산이 보이는 코미디다.

여론조사란 표본집단의 구성이나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카멜레온이다. 경계해야 될 함정이다. 더구나 극히 제한된 특정성향의 입장을 마치 보편적인 다수의견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언론매체의 공신력이 손상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계할 것은 세상을 오도할 위험성이다. 차라리 아무나 만화를 보듯 읽어도 되는 흥미위주 오락성의 읽을 거리로 내놔더라면 모르지만.

(미디어오늘, 1998. 08. 12 정경희(언론인)칼럼 '대한민국 50대 인물'의 함정)

### 박정희가 '산업화의 아버지'인가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해서 스스로 '자원빈국'이라고들 말한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혹독한 겨울'이다. 매서운 추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름에 부지런히 땀흘려 일하고, 거둔 것을 소중하게 저축하는 습성을 얻었다. 낭비를 두려워하고 근검 절약할 뿐 아니라 부(富)를 늘이고 축적하는 합리적 경영마인드도 얻게 됐다.

역사가 토인비에 의하면 '적절한 자연의 도전과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문명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했다. 극한지방이나, 일년 내내 땀벌이 지배하는 열대지방에 문명이 발전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열대지방인 동남아에도 소위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 신흥공업국들의 산업화를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집단은 예외없이 동북아에서 이민해간 화교들이다.

요즘은 뜸해진 듯하지만 1990년대에는 '아시아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들이 아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아시아적 가치' 구체적으로 말해서 유교적 전통을 지목한 것이었다. 동남아 각국에 이민해간 화교들은 유교적 전통을 몸에 지니고 열대지방에 간 것이었다.

결국 한국과 우리들 한국인은 혹독한 추위와 유교적 전통이라는 '자원과 유산'을 함께 누리고 있는 셈이다. 비록 산업화에 있어서 일본에 한발 뒤지긴 했지만, 불과 한 세대도 안 되는 사이에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유교적 전통이 길러낸 '성취욕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 '성취욕 강한 민족'이 이룩한 당연한 기적이었다.

허리띠 졸라매고 '내일'에 희망을 걸었던 '무작정 상경'해온 청소년들, 쥐꼬리만한 기회도 물고 늘어

졌던 구멍가게 중소기업주들, 용솨음치듯 뛰어오르는 인플레이에도 이를 악물고 살림을 꾸려간 가정주부들... 이들이 모두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우리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유신독재'라는 정치적 과오가 있긴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림없는 '경제건설=조국 근대화'의 길을 연 '산업화의 아버지'라는 신화가 살아 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이미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박정희의 신화를 분석·평가한 바 있다(1997년 6월 18일자 '역사 거꾸로 세우기', 1998년 8월 12일자 '대한민국 50대 인물의 함정' 제하의 본란). 간단히 말해서 5·16쿠데타는 냉전시대 동북아를 무대로 한 국제정치의 산물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장면내각이 확정지은 '부정축재처리법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에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한일협정 타결이요, 부정축재 처벌의 포기였다. 또 문민지배의 역사적 전통과 4·19 이후 팽배했던 국민의 민주화 여망을 짓밟고 등장했던 박정희는 철면피한 소수파벌정치에 의존해서 경상도 정권을 만들었다. 또 그 결과로 일본으로부터의 상업차관으로 초보적인 공업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독재정권이 국민 앞에 내놓은 '정치적 보상'이기도 했다.

굳이 그에게 '산업화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바칠만한 근거를 찾자면, 그의 군사독재가 아니었다면 4·19 이후 기세를 올렸던 학생운동의 '매관자본론'을 물리치고 일본의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 해도 그 상업차관이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거대산업의 초석이 된 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린 국민의 불굴의 성취욕과 창의적 노력의 결과였다.

지금도 박정희시대 이래 형성돼온 권력참여 집단과 그 위성집단들은 끈질기게 박정희를 '산업화의 아버지'로 모시는 신화를 다지고 있다. 이 신화가 살아남은 데에는 박정희의 신변 경호부대장이었던 전두환·노태우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유혈학살과 저질 부정축재를 저지른 사실이 기여한 바 크다. 신변 경호원보다 그 주인의 자질이 괜찮았다는 상대적 평가 때문이다.

이제 이 나라의 지성은 5·16과 경제건설의 역사적 맥락을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 어느 세력집단도 감히 '박정희 기념관'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 짓겠다고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국가인 이상 아무도 막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 혈세만은 안 된다. 궁정동의 출판에서 총탄에 쓰러진 박정희는 먼 뒷날의 역사적 평가를 기다리는 뜻에서 조용히 봐두도록 하자.

(미디어 오늘, 2000. 8. 3 정경희칼럼 박정희가 '산업화의 아버지'인가)



##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부정적 유산

### 장 상 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1. 머리말

박정희 장기독재정권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대통령의 독재와 인권억압은 잘못이지만 그 시대의 개발독재 덕분에 고도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경제발전이 바탕이 되어 80년대 후반 이래의 민주화도 가능했다고 박정희 개발독재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는 크게 나누어서 긍정적 평가론과 부정적 비판론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더욱 세분화한다면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박정희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였고, 현재에도 그러하다는 견해이다. 암스텐은 한국에서는 강한 국가가 신규산업 진출에 관한 투자결정 등 일종의 기업가기능을 수행하고, 팽창정책과 외자도입을 통해 단기적 안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외국기술도입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추진력을 계속 유지시켰다고 주장한다.

둘째, 개발독재는 산업화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현재에는 환경변화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는 평가이다. 개발독재 한시적 긍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영은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산업화초기단계에서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고 하며 박정희 개발독재 긍정론을 편다. 이제민은 한국의 경제기적은 정부가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기하는 데는 국가자본주의 유산이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산업화의 돌파구를 여는 어느 단계까지는 국가 개입이 유효하지만 그 단계를 넘고 나면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이행'이 불가피한데 한국은 이러한 이행을 지체시켜왔고 그 결과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독재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병천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반공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산업화'라고 명명하고 반공분단체제와 동아시아 반공블럭이 미국의 한국경제 발전 지원과 노동자억압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화를 위한 온실적 배양기를 조성했고, 박정희정권이 반공 군사권위주의를 체제경쟁적 개발주의와 결합시켜 북한과의 산업화경쟁에 대응의 에너지를 동원했다고 한다. 김용복은 개발국가에는 권위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있을 수 있고, 개발독재 '때문에'가 아니라 개발독재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정권은 개발을 위해 독재를 했다고 보다는 독재를 위해 개발을 주창하고 '결과적'

으로 달성했다고 본다.

필자는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다. 60, 70년대에 전개되었던 박정희식 근대화(경제성장)는 초과착취적 압축성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960, 70년대에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고도성장을 추진한 경제운영 방식, 박정희식 고도성장모델을 추진한 결과 얻은 고도성장의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성공배경

여러 논자들은 한국의 고도성장의 요인을 일제시대의 근대화 기반, 박정희정권의 군사권 위주의적 통제, 미국원조와 외자도입, 수출공업화정책에서 찾고 있지만 이같은 논리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후진국들은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정부 주도로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공업화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유사한 공업화정책을 추구했는데도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국가가 대만과 한국 정도에 그친 것은 이들 국가에 특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60-70년대 고도경제성장 당시 처한 여건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첫째, 세계체제적 조건으로서 60, 70년대 당시의 대외적 조건이 후진국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 수행에 특별히 유리했다.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고도성장과 무역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었고, 다각주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세계경제질서가 형성되고 가트체제가 선후진국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허용하였고, 전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인 우위 하에서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부 후진국의 중심부로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 게 일반특혜관세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개도국(한국)은 외자도입과 수출시장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포착할 수 있었던 나라는 소수에 그쳤다. 단순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생산능력을 갖춘 개도국은 많지 않았고, 이들 나라 중 적기에 정책을 전환한 나라는 적었기 때문이다.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몇몇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만 실행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집단적인 상향이동은 불가능했고, 개별적인 상향이동만 가능했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몰락과 자본가계급의 육성 촉진, 다수 농민의 자작농화, 그리고 한국전쟁에 따른 노동자 농민의 권리억압과 희생이 초과착취적 축적모델에 의한 고도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과 자본가계급의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의 조건을 제공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은 토지를 상실하고 지가증권을 받았는데 상인들과 자본가계급은 이 지가증권을 사들여 귀족재산을 불하받는 등 자본을 본원적으로 축적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지개혁후 자본가계급으로 전신하는데 실패하였지만 그들이 소유하던 자산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그 뒤의 자본주의화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또 농지개혁



을 통하여 지주계급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가계급에 유리한 공업화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이 된 농민들은 더 이상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됨으로써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종속적인 고도성장의 원동력을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들 노동력은 대부분 농가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농가의 자녀교육 확대로 저렴한 임금노동력을 공급한 것이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그 외에도 저곡가를 통한 수탈, 조세수탈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탈로 거둬들인 재원을 재벌들에게 특별로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은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한 계급역학관계를 결정적으로 조성했다. 전쟁을 통해서 한편으로 전근대적인 신분관계를 일소함으로써 자유로운 노동력을 창출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진보적 사회운동 역량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없앴으로써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내전과 분단에 의한 저항세력의 무력화와 그에 의한 정치적 안정은 외국자본 도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이다.

요컨대 한국이 대만과 함께 신흥공업국의 선두에 서게 된 공통적 요인은 모든 후진국이 처한 국제경제적 여건을 일단 제쳐둔다면 내부의 구조적 변혁에 있다. 반봉건적 지주제를 철폐하여 기생적 요소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고, 여기에 전쟁을 겪으면서 노자간의 계급적 역학관계가 자본가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것이 자본가계급과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 조성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조건 위에서 성립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국공업화모델을 후진국 공업화 전형적 모델로서 특권화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제기적은 박정희를 필두로 하는 정치군인들의 독재가 아니라 다수 직접생산 민중들의 피땀으로 얼룩진 노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내용

첫째, 개발독재 방식이었다. 압축적 고도성장은 대외종속과 개발독재에 의한 후진국형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진국은 선진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공업화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개입이 훨씬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국가의 활동은 고도로 발달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나,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었고, 시장형성적(market fostering)인 것이었다. 시장의 발달이 미약한 상황 속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과 자본축적 촉진기능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자본축적을 촉진했고, 시장을 형성해간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운영방식은 거시적 경제운영 뿐만 아니라 미시적 산업구조 개편까지 정부가 주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박정희정권때 경제수석비서관 오원철은 이것을 '경제건설의 공학적 접

근법', '국가적 계획경제 체제' 또는 '한국경제 주식회사체제'로 불렀다. 시장기구와 개방경제에서의 효율성, 즉 경제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자본과 자원이 빈약한 개방경제의 조건에서 수출축진을 최우선시했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며, 시기별 육성계획을 세우며, 외국의 경험과 지식을 도입하여 더욱 세부계획을 세우고, 기업을 주체로 하여 경제계획의 실천을 강행시킨다는 것이다. 요컨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박정희정권의 산업정책은 무역, 재정, 금융, 산업조직, 지역개발정책까지 포괄한 경제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주도가 바로 개발독재인 것은 아니다. 국가주도라 하더라도 군부독재의 형태를 띠지 않았던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보다 한국이 훨씬 후진성을 띠었다.

둘째, 고도성장을 지탱한 원천은 생산성의 향상 보다는 주로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의 양적 확대에 있었다. 단위투입당 산출로 정의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증가는 별로 높지 않았다. 1963-90년에 년평균 성장률 8.74%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요소투입이 6.36%로 약 3/4를 차지하고 TFP는 약 1/4에 해당하는 평균 2.4% 상승하였을 뿐이다. 요소투입 중에서도 노동투입이 3.04%로 기여도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농촌으로부터 연간 50만명씩 이농한 것이 고도 경제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방식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공급능력이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조건이 변화되면 한계에 부딪힌다.

셋째, 외자 도입과 수출지향에 의한 공업화였다.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수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채를 도입하였다. 1960년대에는 투자재원 조달의 40% 이상을 외채에 의존하였고,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도입된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의 합은 24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차관도입이 가장 많았던 1971년에는 차관액이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의 35.8%, GNP의 7.8%에 달하였다. GNP 대비 외채비율은 1965년 7%에서 67년 14%, 71년에는 30%로 높아졌다. 1972-79년에는 125억5천만달러의 차관이 도입되었다. 기간중 차관도입액은 GNP의 5%를 상회했다.

수출입의존도는 62년 18.1%에서 70년 34.3%, 75년 59%, 80년 65.6%로 급상승했다. 1985년경까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외국자본과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국내시장과는 연관이 약한 재생산구조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70년대에 들어와 박정권은 외국자본 도입형태로서 차관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추가하여 외채위기를 완화시키며, 중화학공업화를 통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제분업체제의 변화에 대처하려 했다. 1962-79년에 14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있었는데 1971-73년에 직접투자는 무려 5배나 증가했고,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다. 수출지향 중화학공업화는 핵심기계와 부품을 도입하여 가공수출하는 최종재 생산형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재생산구조상의 종속을 심화시켰다.



넷째, 재벌 육성에 의한 공업화였다. 박정희시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는 기업가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지원조치를 강구했다. 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는 기업이 차관을 배정받는 것이 가장 큰 이권이였다. 박정희정권은 국내에서 부족한 재원을 외자로 충당하였고 이것은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서 재벌들이 성장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1965년에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등 외자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고, 외자도입법이 제정되었다. 외자도입은 국내이자율보다 싼 금리와 환율의 차이에서 오는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급보증도 받는 이중적 특혜였다. 1960년대의 일반은행 대출금리는 17.5% - 26.0% 수준이었지만 외자금리는 5.6% - 7.1%에 불과했다. 1969년말 기준으로 차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쌍룡, 럭키, 대농그룹은 1960년대초에는 10대재벌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1970년대초에는 새로운 10대 재벌로 성장했다.

70년대에는 은행대출과 정부발주 대규모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특혜를 재벌들이 특혜를 받고 리베이트나 커미션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공급했다. 박정희대통령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 선언」으로 방위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과 여신관리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육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현대재벌의 성장은 전형적 예이다.

이렇게 선별하여 지원한 기업이 부실에 빠진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구제해주었다. 60년대 말부터 발생한 부실기업문제에 대해서 박정권은 긴급구제작업으로서 1972년에 「8.3조치」를 강행했는데 이를 통하여 사채동결, 특별자금 대출, 산업합리화자금 대부, 금리인하, 환율안정, 물가동결 등으로 자본은 연간 1,028억원의 금리부담 경감의 특혜를 받았다. 그 중에서 독점자본 분파에 혜택이 집중되었다. 8.3조치는 국가가 중간계층의 희생으로 산업독점자본의 위기를 해소하려 한 것이었다.

다섯째, 노동자 민중의 억압에 의한 저임금 장시간노동, 저농산물가격을 특징으로 하였다. 종속적 중화학공업화를 위해서는 저임금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저농산물가격이 필수적이였다.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노조의 설립이 부자유스러워졌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공무원 교사등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되었다. 쟁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70년대 초반에 반노동자적인 법률들을 집중적으로 제정하고 노동법을 개악함으로써 저임금 체제를 뒷받침하였다. 민주적 노조는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노총이 어용적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불만 표현을 통제했다. 노동관계법 개악은 '유신의 노동계급 억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1970-80년간 임금은 이윤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에 불과했다. 상당수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60시간 이상이었고,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였다.

저농산물가격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0-80%선에 머물렀다. 피폐한 농촌에 대해서 강구한 대책이 신품종도입에 의한 증산정책과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농민 노

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여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함과 동시에 당시 과잉생산되고 있었던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을 겨냥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구호인 「근면, 자조, 협동」에서 드러나듯이 농촌낙후의 원인을 정부의 농업경시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태만, 자립심과 협동심부족 등에 돌림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진입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 등 농촌에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농촌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독점자본의 농업 농촌 농민지배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박대통령은 '10월유신은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은 10월유신'이라고 했다.

#### 4.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성과

박정희식의 「초과착취적 압축성장 모델」은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경제는 1961-80년간 년평균 8.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국민총생산은 약 4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 87달러에서 1981년에는 791달러로 거의 열 배가 늘어났다. 수출은 4천만달러에서 약 210억달러로 늘어났다. 한국은 신흥공업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20여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농민들은 새마을사업과 녹색혁명의 결과 드디어 질량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업화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 연간 50만여명의 농촌 과잉인구를 흡수함으로써 농촌의 잠재실업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급속한 공업화로 산업구조도 농업중심에서 경공업중심으로 되어 국민총생산중 농업부문 비중은 1955년 43.9%에서 83년 14.0%로 저하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에 11.4%에서 28%로 상승하였다. 또한 공업구조도 70년대초까지 경공업 중심에서 70년대후반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20-30년간에 이룩된 급속한 공업화는 선진국에서는 1백년 이상에 걸쳐서 달성된 것이었다.

취업구조도 1963년에는 농림어업종사자가 63%이고 광공업 종사자는 7%에 불과하였는데 채 이십년이 지나지 않은 1985년에 농림어업부문과 광공업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같아졌다. 완전한 공업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영국에서 농업취업인구와 제조업의 취업인구의 구성비가 7배에서 1:1로 같아지는 시기는 1751년에서 1850년까지로 대략 100년이 소요되었고, 일본에서도 1890년대에서 1960년대초로 대략 7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였는지 알 수 있다.

#### 5.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한계와 모순

그러나 이 압축성장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정치적 독재, 경제적 독재체제(재벌체



제)의 경직성은 재벌체제의 심화, 투기의 악화, 부정부패의 만연 등 자본주의적 모순을 급속히 심화시켰다. 유신독재체제는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국민들의 대항력을 봉쇄하고 경제(생산력)제일주의, 사유재산 절대주의를 극한적으로 관철시켰다.

첫째, 박정희식 고도성장 방식은 정경유착을 만연시켰다. 쿠데타를 행한 후 곧 공화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대 의혹사건(부패사건)을 일으켰다. 4대 의혹사건은 일본의 새나라자동차 수입이권, 파친코 수입이권, 증권시장의 주가조작, 워커히 호텔건설 이권 등을 쿠데타세력이 챙긴 것으로 모두 대규모 권력부패사건이었다.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도 박정희정권의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외자도입, 8.3조치,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통하여 재벌을 육성했고, 정권은 재벌육성의 대가로 대규모 정부사업 발주에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외국차관 도입에서도 정치자금을 받았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비자금사건 재판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축재한 경위와 관련하여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관행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통치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군인세력의 부패상은 전·노씨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박정희시대에 이미 만연해 있었다. 정경유착에 의한 자본축적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게 되었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재벌육성정책의 결과 60-70년대의 중속적 공업화를 통해 70년대 후반에 한국적 독점자본인 재벌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가 확립되었다. 국민경제 전체 속에서 20대재벌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7.1%에서 78년 14%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의 비중은 73년 9.8%에서 81년 24.0%로 상승했다. 제조업에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 비중은 73년 31.8%에서 78년 43.0%로 상승했다. 재벌체제는 박정희가 특혜금융 등으로 구축한 경제독재체제로서 재벌의 과도한 채무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과 도산이 현재 경제위기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60년대말의 부실기업문제, 80년대초의 불황과 전두환 정권의 중화학투자조정 등 기업부실 비상대책이 반복되었다.

셋째, 관치금융이 확립되었다. 박정희식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금융기관도 동원된 결과 금융산업은 관치금융으로 만성적 저발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본래의 대출심사 및 사후감독기능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상실하고 정부의 말단창구로 전락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기업은 광범한 도덕적 해이현상에 빠졌다. "우선 많이 빌려놓고 보자. 정부가 책임질 것이다"라고 인식하며 행동했다. 그 결과 대규모 금융스캔달과 금융 및 기업부실화가 고질적 병폐가 되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기능 약화는 80년대에 들어와 경제의 개방이라는 사태에 대응할 능력을 약화시켜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농업이 피폐하게 되었다. 저농산물가격으로 인해 농가소득은 통일벼가 보급재배되고 이중곡가제가 도입되었던 74-77년의 예외적 몇 해를 제외하고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미달했다. 1965년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9.7%였던 것이 1979년에는 각각 84.7%로 되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일년에 약 50만명의 농촌인구가 이농함에 따라 농촌의 낙후와 피폐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농업종사자의 비중은 1963년 64.4%에서 1979년에 39.2%로 감소했다. 농지이용율은 1965년 147.1%에서 1980년 125.3%로 하락했다. 식량자급율은 1965년 93.9%에서 75년에는 73.1%, 82년에는 53%로 하락했다. 현재 식량자급율이 25%, 식용곡물자급율이 50%로 낮아진 식량의 대외의존성은 박정희시대에 구축된 것이다.

다섯째, 노동운동 통제는 기업경영에서 소유자본가의 전횡과 노동자의 근로의욕과 창의성 억압, 생산적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노동억압체제는 숙련과 기술의 축적을 저해하여 투자효율성을 잠식하였다. 또 그것은 노동의 계속적 저항을 유발하여 노동을 체제내로 통합하기 어려웠고, 이것은 계속된 정치불안의 원인을 제공했다.

여섯째,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입각하여 고도성장정책을 강행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시켰다. 지대(이권)추구와 사유재산절대주의, 지가의 급상승 등이 이것을 부추겼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고려할 때 한국의 소득분배 불균형은 정부의 공식 통계로 드러난 것에 비해 훨씬 심하다. 전직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소수 특정집단이 과점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일곱째, 지역개발 불균형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갔다. 엘리트층을 영남지역에서 충원하고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영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호남지역은 소외, 차별했다. 이것은 호남과 영남의 지역균열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역별 총사업체수와 광공업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1963년에 비해 1979년에 오면 경상도 지역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전라도지역의 비중은 절반정도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지역주민소득(GRP)도 1979년이 되면 경남 76만원, 경북 53만원에 비해 전남 47만원, 전북 46만원으로 낮았다.

여덟째, 남녀성비 불균형문제를 야기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27년간 군부독재의 부정적 유산으로 남녀성비 불균형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당시 남녀출생성비는 전국 평균 115명으로 대단히 높았다. 그런데 이것이 도별로 차이가 나서 전북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은 110명인데 대구는 121명, 경북은 124명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 까. 군부독재정권을 대구 경북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장악하고 권력을 농단한 결과인 것이다.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정권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대구 경북 인사들이 중용되어 권력남용에 따른 부정부패 이득을 많이 취하였다. 권력에 접근하는 데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리했고, 대구경북사람들이 남자를 출세시키기 위해 여아 낙태를 자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단기적 경제성장에 급급한 결과 온갖 부패와 불평등 등 잘



못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버렸다. 이 모델은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누적했다고 할 수 있다.

## 6. 맺음말

박정희식 근대화의 공과는 역사발전의 보편성과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과정에는 고도성장이 이루어진다. 농촌으로부터 들어오는 풍부한 노동력과 원시적 축적과정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본이 결합되어 급속한 생산력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후진국의 공업화과정은 선진국의 공업화를 뒤쫓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므로 성장률이 과거 선진국의 초기 공업화 과정에 비하여 높게 된다. 따라서 박정희식 경제성장 추진방식이 고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60, 70년대 고도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노동자 농민의 희생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사정보』 원고 2000. 9)

## 인혁당사건 관련자 등 고문사례

인혁당사건을 둘러싸고 또다시 고문에 의한 조작설이 부분하게 나돌았다. 다만 긴급조치하의 통제된 언론풍토와 대공관계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까지는 소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맨처음 고문과 조작설을 대담하게 터뜨리면서 항의하고 나선 사람은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같은 외국인 성직자들이었다. 이들은 기도회 등의 집회에서 인혁당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이 두사람은 한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인혁당관련 피고인들이 당한 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of an Amnesty Mission to ROK:1975. 3. 27-4. 9) 가운데 36-40면의 내용이다.)

아래에 기술될 증언들은 일차적 자료들도 있고 2차적 자료들도 있다. 즉 일차적 자료란 법정에서 방청한(각 피고인의 가족)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나 피고들로부터 은밀한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들이다. 우리는 이 증언들이 확증이 있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검찰총장은 피고들에 대한 고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5월 1일 『뉴욕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외무장관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월권적인 고문행위"가 있어 왔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문이 미국이나 서독, 영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문에 비해 지독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석방된 학생들을 괴롭히고 한국정부당국이 우리에게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 증언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까 염려되어 처형된 사람이나 현재 수형 중인 증언자들의 이름과 증언날짜 등은 밝히지 않겠다.

### <사례 1>

처음 나는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거기에서 중앙정보부로 끌려왔다. 중정에서 나는 세 방을 옮겨다니며 조사를 받았는데 몹시 맞았다..... ○○일 6시경 나는 또다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실로 끌려갔는데 정보부 수사관 2명과 2, 3명의 경찰이 물고문을 하였다. 처음에 나는 시멘트바닥에 무릎을 꿇리어 군용침대용 철제각목으로 온몸을 구타당했다. 또한 나는 다음과 같은 위협을 받았다. 수사관들 가운데 1인이 이렇게 말했다.

"너는 최종길교수(수사과정에서 자살하였다고 하나 가족들에게 시체를 돌려주지 않았던 서울법대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죽은 걸 아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죽으면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너를 죽일 수도 있으며 너의 시체를 감쪽같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넌 중앙정부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랐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 다음 그들은 나의 옷을 발가벗긴 다음 손목과 발목을 묶고 손목과 발목 사이에 나를 구타한 몽둥이를 집어넣어 천장에 매단 후 입에다가 물을 퍼부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

- ○○○는 내 배후조종자이다.
- 나는 정기적으로 북한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았다.
- 나는 북한을 간 적이 있다.
- ○○○는 북한에 간 적이 있다.
- 우리는 폭력으로 박정권을 전복하려 했다.

그들은 내 온몸과 코와 입에 물을 계속 퍼부었다. 그런 다음 내 생식기를 흔들면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일년 전 이화여대생 하나가 중앙정보부에서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살아났다. 나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는 전혀 수치감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나를 내려놓은 다음 그들은 내 엄지손가락으로 그들이 쓴 「자백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내가 거절하자 이제까지의 과정을 몇 번이고 계속했다..... 마침내 나는 견딜 수 없어 그렇게 했다.

#### <사례 2>

○○○일경 나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두 손을 묶인 채 의자에 묶이었다. 그들은 잠을 못자게 했다. 밤이면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무거운 몽둥이로 구타하고 내 몸을 마구 밟았다. 아침이 되면 나는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 2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내가 간첩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하였다. 이런 식의 고문이 수일간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나는 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했지만 그들은 5일 동안 나를 의자에 묶어놓고 고문하였다. 물론 내 다리는 무섭게 부풀어올랐다. 마침내 나는 그들이 작성한 자백서에 지장을 찍고 말았다. 나는 재판정에서 고문을 받아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날씨만 흐리면 지금도 온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파 온다.

#### <사례 3>

나는 영등포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중앙정보부 6국으로 끌리어 갔다. 3-4일동안 나는 잠못자게 하는 고문을 당하였다. 나는 서대문구치소에 끌리어 갔다가 5일마다 한번씩 중앙정보부에 다시 끌려와 거기에서 3-4일씩 조사를 받았다. 나는 군용침대 각목으로 팔과 다리를 구타당하였다. 얼마 동안 나는 팔, 다리를 쓸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북한방송을 통하여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내 손과 발을 두꺼운 전기줄로 묶고 그 사이에 몽둥이

를 끼워 책상 두 개 사이에 매달았다. 그리고 코와 입에 수건을 꼭 묶고는 그 위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는 그들은

“너 최종길교수가 맞아 죽은 사실을 알아? 너같은 악당들이 몇 죽는다 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들은 나를 묶은 채 내 몸 위에 올라서 밟았고 동시에 내 등을 마구 구타하였다. 감옥에서 나는 무척 배가 고팠다. 내게 영치금이 조금 있었지만 못쓰게 했다. 한동안 나는 수건이나 칫솔 같은 것도 살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이 무척 비참하였다. 우리 중 거의 모두는 독방에 있었다.

#### <사례 4>

○월○일 나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며칠동안 잠못자게 하는 고문을 당하였다. 내가 즐기라도 하면 그들은 목뒤를 강타하였다. 이런 일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리와 무릎이 통통 부어올랐다. 그들이 말한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거짓말한다고 발가벗기고 구타하였다. 구치소에 있을 때 밤마다 간수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내방 앞으로 오면 항상 나는 중앙정보부에 끌리어가곤 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에 다시 끌리어 가면 며칠씩 물고문과 구타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거절했었다. 그리고 며칠동안..... 나는 전기고문을 당하였다. 독재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된 때도 바로 그동안이었다. 이전에는 그들이 이토록 잔인하게 고문을 할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 <사례 5>

○월 ○일 나는 경찰서로 끌려가 거기에서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들은 내가 ○○○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 당시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치 않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리었다. 나를 고문하는 자는 나를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기계로만 여긴 것 같다. 4일동안 잠안재우는 고문을 받았고 총을 든 군인의 감시를 받았다. 내가 줄면 행진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

내가 그들이 말한 것을 끝까지 거절하자 그들은 바닥에 두 손과 발을 대고 굽힌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발로 찼다. 그들은 몸이 나쁜 데가 있느냐고 묻고 그러고는 지하실에 가서 구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없었다.



### <사례 7>

○월 ○일 나는 ... 끌려가 5일 동안 잠을 못자게 하는 고문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부른 대로 내 자백서에 쓰고 지문을 찍으라고 했다. 그 자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왔다.
- 공작금을 받아 썼다.
- 우리는 우리가 이미 구성한 10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려 했다.

내가 거부할 하자 그들은 군용침대 몽둥이로 약 20차례를 때렸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했으며 외국에 있는 내 친척 한사람을 유괴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700MHz로 북한방송을 학생들에게 듣게 했으며 그들에게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라고 사주했다고 쓰라고 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파출소를 불태우고 시청에 들어가 점령하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들이 들어 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그들이 구술한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빼고 쓰지 않아 또 구타당했으며 다시 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나와 이미 구속된 일본인들과 관계가 있음을 시인하라고 강요했다. 재판과정에 그들이 읽은 나의 자백서라는 것은 내가 쓰고 지문을 찍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 <사례 8 - 하재완>

(하재완은 1975년 4월 9일 처형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받았고 그 다음 중앙정보부 직원이 쓴 것으로서 나로서는 읽을 기회도 갖지 못한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당국이 구속한 20명은 전혀 무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15년에서 20년의 징역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다.

중앙정보부에서 취조를 받은 첫 번째 시기인 5월 27일, 나는 수사관이 불러 준 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진술서는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고문과 협박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6월 9일 기소장에 나타난 32개 항목은 이 진술서에서 뽑은 것이다.

4월 28일 나는 고문의 후유증인 탈장으로 고생하였다. 또한 그 후유증으로 항문탈수증과 폐종양으로 고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인혁당 당원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인사들에게 불리한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 고문하에서 되어진 자백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자백들이 진실과 배치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것들은 단지 중앙정보부가 사용한 강압적 수사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전창일의 아내 임인영의 호소문 '세칭 인혁당 가족이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 (『동아일보』, 1975년 2월 3일자 참조)은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저는 세칭 인혁당관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전창일 피고인의 아내입니다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재판은 사실상 비밀재판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증거조사나 증인채택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한사람씩 들어간 재판정에서는 남편들이 죄가 있다기보다는 억울한 정책적인 제물이 되는구나하는 생각만 갖게 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판정에서 "나는 무죄다" "검찰에 넘어와서까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 ... 또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데도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하여 무기징역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형을 받았을 때 ... 저는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호소문을 써 가지고 울면서 호소하러 다닌 것이 죄가 된다 하여 모기관에 연행되어 간지 4일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 저는 모기관에 연행 당함으로써 남편이 강제자술서에 강제지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해했으며 남편이 무죄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2월 17일 시인 김지하는 "인혁당사건 관련 피고인 하재완씨가 심한 고문으로 탈장 및 장파열을 입었다. 나는 하씨를 작년 7월 공판정에서 만났다."고 폭로했다. (『동아일보』, 1975년 2월 18일자 참조) 또한 그는 『동아일보』 2월 26일자에 실린 옥중수기 「고행 - 1974」에서,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인혁당관련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전했다. 그는 이 글 때문에 결국 반공법 위반으로 재구속되었다.

### ※ 인혁당사건관련 결과

1975년 2월 24일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인혁당에 고문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앞으로 인혁당 사건과 관련, 조작설을 퍼뜨리거나 '민주인사' '애국인사'로 지칭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언동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측의 이같은 강경자세속에서 대법원은 4월 8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해 원심대로의 형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도예종 등 8명의 인혁당관련 피고인들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례적인 사실은 대법원판결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에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군법회의 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 지 5일이내에 형을 집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렇다 해도 확정판결 바로 다음날 사형을 집행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이 때문에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 볼 여유도 없었다. 바로 이점이 마지막까지도 인혁당사건을 더욱 짙은 의혹 속에 몰아 넣은 원인이 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5)』, 2186-2191쪽)



## 박정희의 여순봉기, 남로당관련 사실\*

김 점 곤

(여순봉기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작전정보과장)

### 김점곤

이 문제도 선거전에서 윤보선 대통령께서 박정희씨가 여순 반란 사건의 주모자다해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측에서 저보고 '당신이 불러서 내가 보좌관으로 일했다'고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 말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전에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느냐, 그것까지 확실히 해주면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랬다. 차라리 내가 증언을 회피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안했다. 증언을 저만 안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전부다 대통령이니까 부정했습니다만은 신문에도 크게 나고 내 이름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47년에 삼팔선에 처음으로 5개 부대를 배치했는데, 그때 내가 책임자입니다. 그때 박정희 소위가 그 중에 한 부대의 책임자였다. 소대장입니다. 제 4 소대장입니다. 송천이라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재복이라는 목사 출신 공산당인데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당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안 이야기입니다. 춘천에 찾아와서 만났어요. 같이. 연대장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다. 박정희 소위 삼촌이라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재복이라는 아주 특수 조직책이죠. 군부에. 이중업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형인) 상희씨, 이 분이 대구 사건에 연류되서 즉결 처분됐다. 재판 안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한이 아주 박대통령이 큼니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형님인데,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게 즉결 당했다고 생각해서 미국 사람 특히 정부나 관헌, 경찰에게 아주 감정이 안좋았다.

그런 반동으로 자기 형님하고 같이 하던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와서 입당시킨 것이 사실이다. 저한테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해서 구명 운동을 다 했습니다만,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자진해서, 군 총책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가령 최남근이라던가, 김종석이라던가, 군의 선배들이다. 그 사람보다(박정희)... (박정희보다) 한 두기 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물들이 들어있는데 왜 박정희를 총책으로 시켰는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터뷰

일본 군대에 있던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박정희는 자기 형이 공산당원이었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아마 혁명가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시켰을런지도 모른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있다. 자기 형님하고 관계에서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총책을 시켰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총책이라고 해도 자기가 조직한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로서는 공산당이 침투해와서 군내에 조직을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조직체계는 전혀 우리는 몰랐다. 왜냐면 최남근을 잡아도 최남근이 전체 조직을 몰라요. 이걸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오일근도 그렇고 다 몰랐다. 그런데 박정희 이 사람이 국내에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다. (아하! 살아난 이유가 여기에...) 사람 이름을 적는 거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체계이다. 그런데 그 조직 체계를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공로도 생각하고 해서 그 사람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우리 정보국에서 그냥 썼죠. 제 과에서 썼다. 그런 관계로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는 모른 일입니다만, 우리는 싸우러 갔는데, 현역으로 복귀시켜줬죠. 그게 여순 반란 사건에 박정희 소령이 책임자다 하는 것은 시차가 있고, ... 여순 반란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때 입당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남로당 (군사부) 총책으로 남로당에서 임명을 했죠.



## 육 여사는 문세광의 총에 맞지 않았다

나는 터져 나갈 듯 혼돈의 덩어리에 싸여 있는 머리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나의 시선은 잔디밭에 앉아 있는 피뢰적인 누런 색 점퍼 차림의 사나이와 마주쳤다. 그는 현장검증을 시작하기 전부터 줄곧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는데 얼핏 보아도 얼굴이 낯빛처럼 창백했다.

“아니 김 서장이 어떻게?”

중얼거리면서 바깥으로 가려고 하던 나는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중부서장 김원모(金元模) 총경이었다. 현장검증 중이었으므로 자리를 뜰 수도 없었으나 그의 표정이 웬지 처연하게 느껴져 나는 만나고 싶은 염두가 나지 않았다. ‘음, 당신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문득 동정이 일어났다. 아무래도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모가지’가 위태로울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더구나 김 서장 역시 국립극장 안에서 경호경비를 서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립극장이 중부서 관할이었으므로 그가 경찰 경호경비에도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몹시 애처로움을 감내하고 있었다. 기실 나의 판단대로 문세광이 범인이고 또 그와의 공범이 고위층에 가까운 권력자라고 해도 책임은 어차피 경찰에 썩워질 터이었다. 하물며 사건현장이 관할지역임에야 두말할 나위도 없을 터였다.

“홍, 경찰이야말로 동네 북이니까!”

투덜거리면서 나는 바위처럼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는 김 서장을 무심코 쳐다보았다. 이 사건의 범인이 문세광이 틀림없고, 문세광이 출입문을 통과할 때 검문 담당자가 경호관ियो, 경호관의 지시로 문세광이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해도, 또 경호관 이외의 경찰들은 무기도 휴대하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이야 물어 보나마나 경찰에게 올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중부서장인 김원모 총경으로서는 진작부터 옷 벗을 각오를 해두는 것이 그동안의 실례로 보아 당위였다. 김 서장의 낭패함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중부서장은 곧 경무관으로 올라가는 자리로, 경찰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요직이었다. 경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경무관은 곧 꿈이요, 동경의 자리가 아니던가. 직업군인이 장성을 꿈꾸듯 경찰이 경무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원모 총경이 자신의 실수가 아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쩌다 재수없게 걸려들어’ 경무관은 커녕 경찰옷까지 벗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면, 그의 심사야말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리라.

“이 계장, 이리 좀 나와 봐.”

서로 눈빛이 마주치자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 벋긋거리는 김 총경은 수사본부의 다른

수사관들이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재빨리 손짓을 하며 호소하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 (처지가 못됩니다.)”

“.... (아, 어서.)”

“.... (현장검증중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 (제발.)”

김 총경과 나는 국립극장 안팎에서 서로의 표정을 응시한 채 선문답하듯 눈으로 말했다.

“.... (이 계장, 내 처질 모르겠소?)”

“....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 (그럼 어서 나와봐, 답답하군.)”

“.... (답답한건 나도 마찬가지요.)”

“.... (당신도 아다시피 내가 무슨 죄가 있나.)”

“....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던가 총경인 김원모 중부서장은 경감인 나에게 구원을 기다리듯 타는 눈빛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천만 번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당장 달려가 글에게 이 모든 의문점들을 털어놓아야 할 것이었다. 그때 나의 뇌리에는 ‘년, 나가면 죽어’하고 이 모든 의문점을 만들어 낸 권력자의 ‘보이지 않는 힘’의 목소리가 천등을 치듯 거대한 울림으로 소용돌이쳤다.

“.... (뭐하고 있어, 이 계장, 날 살려줘.)”

“....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 (어서!)”

“....”

나는 턱짓으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다른 수사관들을 가리켰다. 다리가 후들 떨리면서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김 서장님.’

나는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요, 언젠가는...’

나는 이 순간의 김원모 총경의 모습을 의식에 새기려는 듯 한참 동안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



다. 어깨가 축 처진 김 총경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김 서장님, 지금 내가 나가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면 당신은 옷을 벗게 되겠지만 나는 비겁자가 되는 것이요.'

나는 김 서장의 모습을 보기가 민망스러워 그만 고개를 돌려 버렸다.

이어 대통령의 경축사가 시작되었다. 흰 점이 박힌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맨 대통령이 연단으로 나와 경축사를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박 대통령의 짜랑짜랑한 음성이 마이크를 통하여 장내에 울렸다.

2층 원편에 자리잡은 보도반의 텔레비전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장내에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는 내고 있었다.

10시 23분.

첫 총성은 울렸다.

그러나 문세광이 발사한 첫 총성은 오발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첫발의 총성은 누군가의 공범에게 보내는 '이제 내가 뒤에 나간다'는 신호였는지 몰랐다. 문세광이 오른쪽 아래 두터운 양말에 끼워 둔 권총을 뽑는 순간 오발을 하여 장내는 뒤흔드는 총성을 울린 것이었다. 문세광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은 38구경의 리볼버로서, 이 권총은 공이치기로 되어 있었다. 공이치기란 사격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공이를 당겨 놓은 다음 격발해야 한다. 문세광은 미리 공이를 당겨 놓은 권총을 뽑다가 오발을 했는데, 이로서 발 오른쪽 봉수아빠 아래를 스치는 총상을 입었다.

'홍, 신호가 아니면 뭐겠어!'

나는 사건 당일의 현장을 눈에 그리듯 선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만이 마이크를 통해서 왕왕 울릴 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을 터였다. 청중들은 연단 위의 박 대통령에게만 신경을 집중하였고, 또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바로 이때 느닷없이 터져나온 총성, 상상에도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될 경축식장에서의 난데없는 총성이 울렸다면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십중팔구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아연실색하였을 것이고, 장내는 그만 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역시 군장성 출신이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 박 대통령은 방탄으로 된 연설대 뒤로 풀썩 주저앉아 몸을 숨겼다. 키가 작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몸을 피하기에 그만큼 수월했을 터였다.

단상에는 중앙 연설대에서 경축사를 하는 박 대통령 외에 박 대통령이 서 있는 연설대를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에는 육 여사, 뒤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울시장 양택식(梁鐸植), 대법원장 민복기(閔復基), 약간 뒤로 비서실장 김정렴(金正廉)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고, 박 대통령 바로 뒤편에 경호실장 박종규(朴種圭), 약간 왼쪽에 의전실장 아무개, 그리고 연설대 원편의 오른쪽에도

국회의장 정일권(丁一權), 광복회장 안춘생(安春生)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과연 그러한 때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육신으로 수류탄을 얹쳐 목숨을 초개같이 던진 강재구 소령 등 청사에 빛날 희생은 얼마나 많은가. 오발의 첫 총성이 울리자 박 대통령이 재빨리 연설대 뒤로 몸을 숨기고 동시에 정일권 국회의장, 양택식 서울시장 순으로 박 대통령을 엮치다시피 뛰어가 몸을 쪼그리고 주저앉았다.

"홍."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스스로 화가 치밀었다. 아무도 대통령 내외를 막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박 대통령이 먼저 몸을 숨겼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 역시 육 여사와 함께 그 단상을 지키고 서 있었을 것이었다. 사람은 목숨이 달려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 한 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 보았다. 아마 자기 한 목숨 구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한 그들 권력자들은 밤낮없이 대통령 옆에서는 총성을 맹세했을 터이었다.

'가증스럽게도!'

나는 절로 모멸감이 일어났다. 정녕 그 장면이야말로 군사정권의, 아니 소위 권력자들의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몸을 피한 사람들은 그들 뿐만이 아니었다. 여자인 육영수 여사를 제외한 단상의 모든 인사들은 앞 뒤 가릴 것 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쳤다.

10시 23분. 대통령이 연단 뒤로 몸을 피하고, 경호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피한을 향하여 응사하는 것이 한 순간의 일이었다. 단상의 인사들은 거의 몸을 피하고, 비다시피 허허한 단상에 여사는 의연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늠름하게 앉아 있는 의연한 긍지, 죽음을 초월한 준엄한 직책감, 단정한 모습... 육여사의 상반신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제1발은 오발."

중얼거리면서 나는 수사수첩에 기록했다.

문세광이 앉은 자리는 MBC 카메라가 설치된 B열 끝부분 214호석이었다. 단상 모서리와 출입구 쪽의 뒷벽까지의 거리는 24미터 60센티, 문세광이 앉아 있던 214호석까지는 22미터 35센티. 의자와 의자 사이는 1미터 90센티. 썩 자유롭게 움직이며 식당 내의 목표물을 향해 사격 할 수 있고, 또 실력에 따라서 명중하기에 그다지 어려운 거리나 위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6. 4 전국경찰사격대회등에서 2등을 한 적이 있는 나는 사격이라면 꽤나 자신이 있는 편이었지만 기실 사격 초보자가 생각해도 문세광이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다고 믿지 않을 것이었다. 또 '오발'이라고 하였으나 나의 추측으로는 그때 그 시간이 도저히 오발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세광이 오발이었다고 했고, 탄흔도 선명하게 남아 있으므로 오발이라고 하자.



과연 단순한 오발이었던 말인가. 나의 판단으로는 첫 오발의 총성이야말로 누군가인가 '공범'을 향해 '이제 내가 튀어나간다'는 '신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쨌거나 오발의 첫 총성을 울림과 동시에 불쑥 일어난 1미터 70센티 가량의 키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문세광은 B. C열 사이의 복도로 11미터 가량 단상 쪽으로 뛰어 나가면서 정면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단상 모서리의 가로 길이는 1미터 20센티. 식장의 좌석 배치는 A. B. C. D. E열로 A열에서 E열까지는 10미터 90센티. 문세광이 제2탄을 발사하기 위해 잠시 서 있는 곳은 B열의 108호석과 C열의 97호석 사이 통로. 순간 '타양'하는 제 2발의 금속성이 장내는 뒤흔들었다.

제2탄은 연설대 왼쪽 3분의 2정도 상단에 맞았다.

한편 청중들의 웅성거림 속에 문세광은 경사진 통로를 16. 7미터쯤(제2탄 발사 지점에서 5미터 60센티) 계속 뛰어 내려갔다. B열 48호석과 C열 37호석 사이의 통로에서 문세광은 권총을 들고 있는 오른팔을 왼손으로 받치고 '타양' 제 3탄을 발사했다.

제3탄은 단상 뒤의 벽 정면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의 좌측 중앙에 맞았다.

제3탄을 발사한 문세광이 2미터 20센티를 달렸을 때 앞쪽 독립유공자석에 앉아 있던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계장 이대산(李台山)씨가 발을 내밀어 문세광의 다리를 걸었다. 순간 비틀리며 문세광은 쓰러지기 직전 오케스트라 피트와 B. C열 중간 한복판에서 제4탄의 방아쇠를 당겼다. '타양' 앞으로 거꾸러지는 동안 상체를 뒤틀려 발사한 총알은 단상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제4탄이 맞은 지점은 단상 위 천장이었다.

문세광이 권총을 내동댕이치면서 쓰러졌으므로 마지막 탄환 한발이 든 권총은 오케스트라 피트 안쪽으로 떨어졌다. 그제서야 단상 위에서는 4, 5명의 경호원들이 대통령의 연단을 둘러보고 다른 경호원들은 쓰러진 문세광을 덮쳤다.

"이거 뭔가 이상하군."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다시 '다섯 발째 실단은 권총에 남아 있었음'이라고 적었다.

그때였다. 나는 손을 부들 떨며 비명을 삼켰다.

'아, 이럴 수가!'

머리속에서는 별안간 어디선가 휘몰아쳐 온 바람이 맹렬한 기세로 회오리를 일으켰다. 이제까지의 의문점들이 산사태처럼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제발, 내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품어 왔던 수사관인 나(이건우 경감)의 의문점을 확고한 신념으로 믿게 해주는, 더 이상 '빠도 받을 수도 없는' 증거이기도 했다. 과연 이것 이상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결론짓듯 단정을 내렸다.

### '문세광은 육 여사의 피격한 범인이 아니다!'

원래 문세광이 소지한 리볼버 권총은 다섯 발의 실탄밖에 장전할 수 없었다. 물론 6연발 리볼버가 없는 것은 아니나 문세광이 소지한 권총은 5연발이었다. 그리고 문세광이 발사한 실탄은 네 발 중에 제1탄은 오발, 제2탄은 연단, 제3탄은 태극기, 제4탄은 천장에 맞았고, 나머지 한발은 권총에 남아 있었다. 도대체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실탄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놈들이!'

나는 어쩔 현기증이 일어났다. 머릿속에서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던 회오리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설마, 설마...' 하면서도 실낱같이 매달려 왔던 기대와 믿음이 깨졌을 때 밀려오는 것은 배신감이었다. 나는 폭풍처럼 거세게 덮쳐오는 배신감에 천길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망연자실 구경하고 있어야 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연출자와 배우 등이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를 하듯 한 점 의문사항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도 분위기도 되지 않는 가운데 현장검증은 '현장검증'이라는 탈바가지만 쓴 채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나는 지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연출자는 누구며 시나리오는 누가 창작했는가. 기실 사건 당일인 어제부터 '대통령 저격사건'이라는,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 절명한 사건치고는 수사과정이나 판에 박힌 결과를 성급하게 도출하여 졸속하게 발표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할 터였다. 문세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까!....

문세광의 총구에서 남긴 탄흔의 사진촬영이 끝날 무렵 중앙정보부 아무개 6국장이 식식거리며 현장검증팀 사이로 두벅두벅 걸어왔다.

"이거, 이럴 수가 있다. 이런 죽을 놈들이!"

"무슨 일인데 그러오?"

정치군 부장이 물었다.

"아, 글세, 무슨 일이나마나 이래도 되는 거요. 이런 개 같은 자식들!"

노발대발하면서 중정 6국장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샷대질을 했다.

"허어, 무슨 일인지 알아야 그래도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할 거 아니요. 누가 개 같은 자식들이라는 게요?"

"누군 누겨, 일본 NHK방송인가 나발인가 하는 놈들이지."



“NHK에서 뭐라고 했게요?”  
 “하, 그놈이, 그 야마모도 논설위원인지 지랄인지 하는 놈이 말이지...”  
 “원, 답답하긴. 아, 야마모도 논설위원이 어쨌게요? 그 친구 일본에서 꽤나 저명한 논설위원인데.”  
 “정 부장도 그 작잘 알고 있구먼.”  
 “알다마다. 그래서 야마모도 논설위원이 뭘 어쨌다는 게요?”  
 “글쎄, 그놈이 이따위 해설방송을 했지 않겠소.”  
 “이따위 방송이라니, 무슨 방송을, 언제?”  
 “언젠 언제겠소. 어제 열두 시 십 분이시.”  
 “음, 그러니까 정오 뉴스시간이겠구먼.”  
 “뉴스는 무슨, 속보였겠지.”  
 “그래, 무슨 해설방송을 했다는 게요?”  
 “여기 녹음을 해왔으니 한번 들어 보시오.”

중정 6국장이 화난 표정으로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나는 녹음기 앞으로 다가서며 재빨리 계산을 해보았다. 어제 12시 10분이라면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하게 1시간 47분이 경과한 시각이었다. ‘그 시간에 무슨 해설방송을?...’ 나는 역시 아연하면서 녹음기를 향해 신경을 집중시켰다. “... 고노 지경과 강고꾸 세이후노 나치 히토라시기 지사쓰 계기데스...” 순간 나는 귀가 멍해졌다. 무슨 말인가?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나치 수법식 자작극이다.’

야마모도라는 일본 NHK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나는 일찍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적어도 야마모도 쯤 되는 논설위원이라면 더구나 NHK라면 일본 공영방송국으로서, 그것도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 47분 만에 남의 나라 대통령 저격사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작극이라고 허위방송 할 수 있던 말인가. 나는 웬지 야마모도 논설위원이 문세광에 대한, 아닌 박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야마모도 논설위원은 이어서 ‘저격사건이 1930년 나치가 국회의사당을 방화한 것과 같은 조작이다’라고 덧붙이면서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해설을 강조하고 있었다

“자작극이다. 자작극...”

나는 야마모도 논설위원의 해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며 음미하듯 뇌었다. 중정 6국장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나치 수법이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외무부를 통해 이따위방송을 하게 내버려 둔 일본 정부한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구. NHK인지 나발인지 이 자식들 말이야. 이따위 방송을 하는 이것들한테도 책임추궁을 하고 말이야.”

“그렇구먼.”

정치근 부장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 음.”

신음을 토하며 나는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로서는 문세광이 대통령 저격미수사건의 범인임에는 틀림없으니 작어도 그는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확증도 있는 것이었다. 그때 나의 뇌리에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어젯밤 심야에 탄두를 제거해 갔다는 국립극장 소도구 주임의 증언이 커다란 울림으로 엄습했다. 초동수사의 의미가 곧 현장보존이 목적이려면, 결국 사건 직후 초동수사를 현장보존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무서운 일이다. 이 거대한 흑막을 어찌해야 하는가.

연단 위 경호원 2명과 독립유가족 좌석의 50대 부인 1명이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가 로열 박스의 육 여사를 부축, 안아서 무대 뒤 통로로 황급히 나갔다. 거의 같은 순간에 성동여실 합창단 속에서 여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합창단원 장봉화(18세) 양이 피를 흘리면서 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범인이 경호원들에게 양팔과 양다리를 들린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동아일보》 1974년 8월 16일

내가 성동여실 합창단 장봉화 양에게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은 바로 현장검증이 끝날 무렵이었다. 수사관들은 각자 나름대로 의문을 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현장 검증 자체가 어딘지 보이지 않는 힘에 맞추어 짜깁기하듯 척척 진행되는 느낌이었고, 현장검증에도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피격된 것으로 연출되고 있었다. 나로서는 현장검증 자체도 ‘자작극’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두커니 넋을 빠트리고 있었다. 실제로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피격된 것’이라면 곧 조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조작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야 말로 국민과 유가족의 살아 있는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너무나 서툰 조작이 아닐 수 없었다. 과연 이런 조작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통하다니!... 차라리 나는 스스로에게 한심하다는 듯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조작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문세광이 육 여사를 피격했다는 것은 천장에 탄흔이 남아 있는 제4탄으로서 제4탄은 약 18.2미터 전방 단상에 앉아 있는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향하여 발사, 우측 두부(頭部)에 명중시키고... 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천장에 탄흔이 남아 있는 제4탄이 어찌하여 육 여사의 오른쪽 두부를 관통시켰는가 말이다.

... 할말을 잃은 듯 입만 멍하니 벌린 채 나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마음은 확실한 믿음 - ‘조작하고 있다’고 - 에 가 있고, 육신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때



나의 머리에는 물찬 제비처럼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있었다.

‘조작도, 조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작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위카’의 근성인 모양이군. 흥, 위카니까 무슨짓이든지 하면 된다고 믿나 보군. 빌어먹을.’

기실 당장에는 나뿐만 아니라 수사관 누구도 의문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저 정처근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짜여진 현장검증을 확인해 주는 입회인이나 다름아니었다. 나 역시 목통을 터질 듯 외침이 밀려왔으니 꾸역 삼키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눈망울만 데굴데굴 굴리고 있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었다. 시나리오를 제공한 ‘보이지 않는 힘’은 실로 거대한 압력이었다. 도대체 문세광이 육 여사를 피격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다니! 그때 나의 수사예감에 섬광처럼 나타난 그림자는 ‘경호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피한을 향하여 응사’하는 장면이었다.

‘박종규 경호실장!’

나는 신음처럼 그의 이름을 뇌었다. 사건 당시 식당(현장)에서 총을 쏜 사람은 문세광과 박종규 경호실장뿐이었다. 더구나 박 실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피한을 향해 응사’한 것이 아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세광이 발사한 제2탄이 맞았던 연설대 오른쪽(경축객 쪽에서 단상을 향해)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응사한 것이었다. 그가 앞으로 나와 서 있던 위치는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 옆에서 쓰러질 때의 문세광과 육영수 여사가 앉아 있는 대각선상이었다.

“아!”

탄성을 삼키면서 나는 ‘어젯밤 경호실에서 나와 다 쓸어 갔다’는 국립극장 소도구 주임의 증언을 상기했다.

사건 당일 모두 일곱 발의 총성이 났는데(《뉴욕 타임즈》), 문세광이 발사한 4발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3발은 박종규 경호실장이 발사한 것일 터였다. 일찍이 사격의 명수로 알려진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아니, 지난 1970년 대한사격연맹 회장직을 맡은 이래 1971년 아시아사격연맹회장(1976년 세계사격연맹 부회장을 역임했고, 1978년 가을에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치르기도 했다)이 된 그는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격실력으로 체육계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어느 기자는 박종규가 ‘1979년엔 김택수 후임으로 대한체육회장 겸 KOC위원장에 선출됐는데, 그가 1984년 7월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대우를 해주는 IOC위원에 피선될 수 있었던 것도 1970년대 접어들어 체육계에 다지기 시작한 기반’ 때문이었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박종규가 대통령 경호실장에 발탁된 것도 그의 뛰어난 사격솜씨 때문일 진대, 그는 결국 사격으로 자신의 인생을 활짝 꽃피웠다고 할 수 있을 터였다.

기실 총기(권총)사건의 속성은 사격(권총)을 해본 사람만이 그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인지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1964년 전국경찰사격대회에서 2등을 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번 사건의 ‘흐름’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문세광이 발사한 제1탄(오발이었으나)의 총성으로 식당 안은 순식간에 수라장을 이루었을 터였

다. 실제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성이 터졌다면 경축객들의 혼비백산함이야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을 터이고, 그 와중에서 ‘뜻있는 자가 무슨 짓’을 저지른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과연 권총 사격을 해본 사람만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문세광이 제1탄에서 제4탄까지 발사한 시간이 22초밖에 걸리지 않았듯이 일단 권총을 뽑아 들면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순간이요, 초싸움이라는 것은 권총 사격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손목 하나 까딱함으로써 90도 안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발사할 수 있으며, 팔을 휘둘렀다면 180도, 선 채로 몸만 비틀어도 3백 60도 어디에 있는 목표물이라도 순식간에 명중(사격 솜씨에 따라서) 시킬 수 있음은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말이다. 나는 박종규 경호실장이 달려나오면서 단상 아래 경축객을 향하여 응사하는 몸짓을 하고 있는 위치를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었다.

(저격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 이건우 양심고백록

노가원, 『영부인 암살자』, 동광출판사, 1989. 140-154쪽)



▶ 중앙일보 [ 사회 ] 1999. 5. 21. 金

### 민주재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제의

다음 달 초 창립하는 한국민주재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민주재단 추진위원 김종배(金重培)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이창복(李昌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은 "'박정희 기념관'도 추진되는 마당에 과거 민주화 운동을 기념할 전당(殿堂)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며 "기념관 설립을 위해 정부 지원은 물론 '1국민 1벽돌 후원운동' 등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87년 6월 민주항쟁 12주년을 맞아 6월10일을 '민주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6월 민주항쟁 12주년을 맞아 다음달 10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기념음악회가, 다음달 9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민주화운동 사료전시전'이 열린다.

▶ 『한겨레신문』 1999. 8. 4 수

### [국민기자석] "독재 잘에 박정희기념관?" 시골노인들도 냉소적 반응

시골에 가니 아버지를 비롯해 동네 노인분들이 한방에 계셨다. 내가 "아버지 이번에 정부가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다는데요"라고 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노인들은 "왜? 독재 잘했다고?" 하며 냉소를 보였다. 모두 박정희 시대에 아침저녁으로 국토건설에 동원되면서 청춘을 보낸 사람들이다. 박정희 향수에 가장 깊게 물들어 있어야 할 분들이 이렇게 냉소적인데, 과연 현재 존재하는 박정희 향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부 주도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은 민주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준다. 기념관이란 글자 그대로 훌륭한 이의 공덕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다. 박정희 통치관이나 그냥 역대 대통령 통치관이 라면 몰라도 아직 가치평가가 많이 내려져야 할 사람을 정부가 나서서 기념한다면 과연 누가 역사를 두려워 할 것인가? 이러다 전두환·노태우 기념관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김구 선생의 기념관도 아직 없는 이 땅에 독재자 기념관 얘기가 나오니, 과연 이 땅에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거나 한 것인지 매우 헷갈리는 요즘이다.

이상훈/대구 수성구 지산2동

### 민족문제연구소, 이달의 친일인물로 박정희 선정

박정희 기념관 건립위원회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거물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정해서 화제다. 작성일 : 1999-08-09 작성자 : nuovo(뉴스센터)

박정희 기념관 건립위원회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거물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정해서 화제다(관련기사 본지69호). 친일파 연구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이화여대 전 총장인 김활란을 이달의 친일인물로 선정한 이래 지난 8일, 8월의 친일인물에 박정희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 사실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내용을 담아 연구소 전용 인터넷홈페이지(www.banmin.or.kr)에 공개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정해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올린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보면 '오카모토 미노루 생도의 답사'라는 부분에는 그가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며, 일제 괴뢰국인 만주제국의 신경군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해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다고 답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가 일본육사에 다닐 때에는 육사교관이었던 나구모 쥬이치가 "다가기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이외에도 > 박정희의 독립운동? > 배신과 생존 > 장기독재의 길 등 박정희의 생애와 친일·독재 행위에 대한 글들이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인터넷에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 것과 관련해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기로 해서 박정희에 관련한 일련의 분쟁이 싸이버 세계에서 치열해질 전망이다.

출처 : 일일문화정책동향

### 민족민주열사들을 욕보이지 말라!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둬야 합니다. ...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에 감격하며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다. 고통과 눈물 속에서 세월을 보낸 수많은 민족 민주열사들의 가족들과 지난 시절 고난을 겪으며 끝없는 투쟁을 해 온 민족, 민주 운동세력들도 기대에 차 있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은 노동자, 농민, 학생, 민족 민주운동세력,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온 모든 사람들의 30년 투쟁으로 집권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어느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30년간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애증의 대상이었고 일정한 부분 만큼 김대중에 대해 사람들은 지지와 연민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전두환 집단살인 군부정권, 노태우, 김영삼 그 허위와 기만정권에 반대하여 그 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99년 여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를 용서하고 찬미하겠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용서하든지 박정희 기념사업을 벌이든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0년 투쟁의 결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고 집권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끝없는 투쟁의 결과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했다. 김대중 대통령 혼자서 잘나서, 혼자서 온갖 고통을 겪고, 혼자서 민주투쟁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이 목숨을 바쳤고, 독재 정권들의 대를 이어가며 학생들이 감옥에 가고, 이름 없는 수많은 민주 투사들의 고통과 끝 보이지 않는 투쟁,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유지 목적이 분명한 박정희 끌어안기를 하고 있다.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박정희 기념사업을 정부와 정권차원에서 하지 말기 바란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다. 박정희를 기념하고 찬미하려면 권력에서 물러난 후에 개인적으로 하라. 이미 김대중 정권의 본질과 속성은 국민들이 다 깨우치고 있다.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재벌과 기득권층만 살찌우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를 유지 확대하는 정권이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을 다 안다. 김대중 정권은 재벌 정권이고, 부패한 관리들의 정권이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의 정권인 것이다. 기만과 허위의 언론들이 지켜 주는 정권일 뿐이다. 그들을 기반으로 한 개혁이 무슨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지난 30년간 시련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고 개혁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에게 마지막 남은 피땀까지 바쳐 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왔다.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은 100조 이상의 세금을 내고서도 재벌과 외국자본을 살찌우고 가진 자들만 더 잘 살게 만들었다. 정작 정권교체의 기쁨을 누리야 할 노동자들은 400만 이상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 없는 것인가? 기득권만 살찌우는 구조조정용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월급쟁이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농민, 노동자, 학생, 서민들은 다 필요 없을 것인가? 항상 권력에 대항하고 투쟁만을 해 온 민족 민주세력 따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수십년간 부패에 젖어 있는 전문 관료들과, 기회주의적 속성에 익숙한 정치인, 파리에 같은 언론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과거 모든 정권이 그것만으로 4천만 국민들을 마음대로 요리했듯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들의 도움만 있으면 충분히 권력을 누리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온갖 쓰레기들을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끌어들이었으니 전두환이도 손잡고 노태우도 손잡고 김영삼이도 껴안아라. 국민들은 보수를 좋아하니 언론과 함께 국민들을 기만하고 끝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라. 다만 한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김대중 정권을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 기반은 이

미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자, 농민, 학생들 서민 대중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과 세계자본의 편이고 재벌과 가진 자들의 편이고 친일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쓰레기 언론의 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일제 때부터 군사독재정권, 사이비 문민정권까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던 놈들의 편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김대중 정권에게 부탁한다. 제발 민족민주열사들을 욕보이는 행위는 하지 말라.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과거의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 달라. 박정희 기념사업 따위는 보통사람으로 돌아간 후에 역사책을 쓰든지, 기념제단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하라. (1999. 6. 5)

공재호 (본회 수석 부회장 한국감정원 전 노조위원장 서울대 입학73)

▶ 한국일보 1999/09/13(월)

[연대사 다시 쓴다] 유신체제

박정희 장기집권 노린 '친위 쿠데타'

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일대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특별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모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국무회의를 신설하여 국회권한을 대행케하는 초헌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11월 21일 야당의 반대운동이 일제 금지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몽 활동 속에서 치루어진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신헌법이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정치는 민주 헌정의 중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87년 6월까지 독재체제의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게 되었다.

정치적 충격이 연속된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은 충격적인 정치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69년 9월의 변칙적인 3선 개헌안 국회통과가 그러한 충격파의 시발이었다면, 72년 10월의 이른바 「10월 유신」은 그 종착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 연초에 야당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이 들려오더니, 2월에는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를 표방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나왔다. 적대국가인 중공(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표방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한 「닉슨 독트린」은 한국의 집권 세력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안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9월에는 40대의 김대중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지명되더니, 11월에는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의 분신자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한 성장일변도



정책이 밑으로부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1개월 전인 71년 3월에 미국은 주한미군 6만명 중 1개 사단(약2만명)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95만여표차로 신승하는 데 그쳤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이 선거에서 두 후보는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등에서 첨예한 정책대결을 펼쳤다. 김대중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을 위해 총통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박 대통령은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나서지 않겠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대응했다.

###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순들

71년의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불안정의 종착점이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유신독재체제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은 71년 5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단없는 조국군대화」와 「혼란없는 안정」을 강조했으나, 「총통제 음모분쇄」를 내세운 야당에게 사실상 패배했다. 신민당은 이 선거에서 44.4%의 득표율로 이전의 의석 44석 보다 2배가 넘는 89석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과 공화당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돌파하려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불과 7개월여만인 12월 6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위협」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72년에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유신체제로의 개헌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냈다. 8월에는 무원칙한 외자도입과 부실차관기업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사채시장을 동결하는 초헌법적인 「8·3조치」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미 72년 5월부터 「풍년 사업」이란 암호명아래 유신헌법 작성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71년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동아일보의 언론자유수호운동, 무려 80여명의 소장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촉발시킨 사법권 수호운동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투쟁이 전개됐으나 독재체제를 향한 박 대통령의 행보를 멈출 수 없었다.

###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헌정중단과 초헌법적인 조치들을 통한 유신체제의 성립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적응,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실체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 확실히 주한미군의 철수, 7·4 남북공동성명은 기존의 냉전적 안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태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유신체제로의 전환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다.

즉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는 그후 곧바로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됐으며,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한국 포기가 아니라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신체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이른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경제가 직면했던 위기는 관료적 권위주의론이 주장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운동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당시 산업구조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경제적 필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이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유신체제의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 유신체제의 유산

유신체제의 성립,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상실한 박 정권이 점차 확산되던 반독재국민운동의 도전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연장하려는 집권 세력의 정권욕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 운동은 그러한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기도를 막아 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그만큼 강력한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 등의 통치기구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일관된 유신독재 체제는 수많은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후퇴시켰다. 특히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군인의 양산은 훗날 신군부 집권의 비극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유신체제 기간동안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와 소득분배를 가로막는 재벌특혜정책,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구축된 것이었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남긴 유산들로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간 또 다른 충격적 회오리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정영국(鄭榮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한겨레신문 [ 사설칼럼 ] 1999. 7. 18. 日

### [강만길] 역사칼럼-프랑스 대숙청과 친일파 청산

오랫동안 프랑스 주재 특파원을 지낸 주일섭씨의 저서 <프랑스의 대숙청>을 읽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와 독일의 프랑스에 대한 지배는 같은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민족사회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였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조선 지배와 독일의 프랑스 지배가 같았다. 조선의 피지배기간이 근 40년이요 프랑스의 그것이 5년에 불과한 점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경우 국내 게릴라부대들이 있어



서 미·영 연합군의 파리 입성 전에 게릴라들이 먼저 파리를 해방시킨 점과, 드골의 '민족해방프랑스협의회'(CFLN)가 국내의 반나치 게릴라부대들과 협력하여 미국 등 연합군이 점령지구에 군정을 실시하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취한 점등이 크게 달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지 못했고 국내 저항세력과도 연결되지 못했다. 조선독립동맹 등 해외 좌익조직은 건국동맹 같은 국내 저항조직과 일부 연결되었으나 일본군 항복 전에 국내로 진격해 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미·소 양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군정을 펴게 되었으며 이 점이 프랑스의 해방과 크게 다른 점이었다. 같은 파쇼세력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조선과 프랑스의 해방 과정이 이 같이 달랐기 때문에 반민족세력에 대한 숙청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게 불과 5년간 점령당했던 프랑스에서, 사형선고 된 6천7백여명 중 7백60여명이 집행되었고, 2천7백여명이 종신강제노동형, 1만6백여명이 유기강제노동형, 2천여명이 금고형, 2만2천여명이 유기징역형을 받았으며, 3천5백여명의 공민권이 박탈되었다고 <프랑스의 대숙청>은 1951년 프랑스 정부의 의회보고를 통해 밝히고 있다. 북한의 반민족세력 즉 친일파에 대한 숙청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통계와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업적을 구할 수 없지만, 남한의 경우 이승만 정권의 반역사성 때문에 한 사람의 친일파도 제대로 숙청되지 않았다. 4·19는 그런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렸으나 그 주체세력이 정권을 쥐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색이 짙은 장면정권이 서게 되었으며, 그것을 뒤엎고 성립된 것도 구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 정권이었으니 친일파 숙청이 단행될 리 없었다. 이제 해방된지 반세기가 지나 친일파는 극히 일부가 잔명을 보전하고 있을 뿐 대부분 죽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일본과의 화해를 더 심화시키면서 대중문화를 개방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지금 일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친일파인명사전'을 만들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1만 명에 가까운 대학교수들이 이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곧 '친일파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지금에 와서 왜 새삼스럽게 또 때늦게 친일파 운운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친일파를 숙청하는 일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해도 그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역사적 청산은 한번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점에서는 지금도 전혀 때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숙청'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청산'만은 앞으로 우리 역사의 바른 발전을 위해,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면서 새 역사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한번 거처야 한다는 말이다. '친일파인명사전'을 만드는 작업은 주로 그들의 이름과 반민족 행적을 소상히 밝히는 일이 되겠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반민족행위인가, 그들은 왜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들의 '친일논리'는 또 무엇이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해방 후 왜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득세했는가, 그들의 반민족 행위가 일제시대와 해방후의 시대를 통해 우리 민족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의 우리 역사 진전에 끼칠 해독은 무엇인가 등을 이론적으로 냉철하고도 소상하게 밝혀 다시는 그들과 같은 반역사적·반민족적 행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강만길 / 고려대 명예교수

▶한겨레신문 [ 사설칼럼 ] 1999. 8. 5. 木

**[편집자에게] 아버지 앓아간 독재정권 미화라니**

'독재자에게 후한 한국인'(일치 9면)이란 칼럼을 읽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독재정권의 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분이 결국 지역패권주의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나의 아버지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 74년 3월 어느 날 잠허가신 아버지는 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24시간도 안 돼 다음날 새벽 나의 아버지를 포함한 여덟 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독재정권에 잡혀간 뒤로 단 한번의 서신도, 단 한번의 가족 면회도 허락되지 않은 채 시신마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독재자 박정희가 저지른 추악한 인권 유린과 범죄는 감춰진 채 미화하고 다듬어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념관 하나 없는 한국에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박노자 교수의 지적은, 기념관 건립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과 정당과 정치인에게 한번 더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송명희 /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겨레신문 [ 사설칼럼 ] 1999. 9. 2. 木

**[야 한국사회] /그랬 박정희를 기념해보자/이진경/서울대 강사**

어떤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은 기억에 관한 영화다. 거기서 왕가위는 형수가 되어버린 과거의 연인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는 한 검객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감독보다 배우가 유명해 <시고니 위버의 진실>이라고 번역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죽음과 소녀> 역시 기억에 관한 영화다. 고문의 기억, 그것을 지우지 못하는 폴리나는 밤에 다가오는 자동차나 문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도 목숨을 건 긴장 속에 들어간다. 사실 어떤 과거의 일, 그 기억을 벗어 던지지 못해 매여 있는 존재, 그것은 유식한 말로 '중음신'이요, 여름이면 자주 보게되는 '전설의 고향' 귀신들이 아니던가? 귀신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언가? 알다시피 원한을 풀기 위해서,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사를 지우기 위해서다. 그것이 지워지면 그들은 아무런 주저 없이 떠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귀신드라마는 기억을 지우는 것으로, '해원'으로 끝이 난다.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지우지 못하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억만큼이나 기억을 지우는 게 중요한 건 이런 이유다.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선사들의 방법이다. 깨달음을 통해 일체의 집착을 끊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적어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나 기억에 매여 공포와 긴장 속에 혹은 환상 속에 사는 범부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치유'다. 잊을 수 없던 과거를 불러내



어,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멧힌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다. 귀신의 원혼을 달래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신분석가가 사용하는 방법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의식에선 지워졌으나 무의식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를 찾아내 드러내는 게 바로 그들의 치료 방법이다. 이 점에서 정신분석과 무당의 굿은 하나의 경계 안에 있다. 자신을 고문한 의사를 죽음으로 협박해서라도 '진실'을 찾으려는 폴리나의 '정신병적' 행동도 그렇다. 진실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원한을 풀려는 것, 그것은 무당의 방법이자 정신분석가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기념'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기억이라는 개념과 나란히 간다는 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점은 기억이 무의식적인 것임에 반해 기념은 의식적인 것이라는 거다. 즉 과거의 어떤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불러내는 것을 기념이라 한다. 그것은 생일이나 광복절처럼 좋은 것도, 전쟁이나 위안부 문제처럼 나쁜, 아니 아픈 것도 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기념의 방식이 있다. 가령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교회가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를 죽여 강에 던져버린 곳에도 그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최근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려는 국가적 시도에 대해 감히 지지한다. 그래, 그것은 만들어져야 한다. 뒤에 전두환 기념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도 찬성의 한 표를 던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가! 그 아픈 영혼을 달래고 쓰린 기억을 아프게 끄집어 풀어주는 그런 노력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오히려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는 '인혁당' 관련자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 '성장 조국'을 위해 뼈빠지게 일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 사람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나 개발주의로 인해 죽어버린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들, 공동체적 관계들도 들어가야 하고, '반공' 국시가 만들어낸 극한적 적대관계도 들어가야 한다. 또 그런 종류의 독재가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 기념해야 하니 10·26 기념실도 반드시 따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하여 박정희라는 이름과 결부된 아픈 기억의 상처들이 자유로이 허허로운 하늘 저편으로 훨훨 날아가버릴 수 있기를...

▶ [교수신문], 1999. 10. 4. '신문로세평'

### 이승만, 전두환 기념관은 또 누가.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방침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의 만찬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건립추진위원 40여명에게 국고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국회의 동의절차가 형식적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여론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고를 들여 지원하고, 대통령이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최대의 피해자인 대통령 자신이 고 박대통령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것은 전직대통령 예우법 제5조에 기념사업을 정부가 돕도록 되어있어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관련 보도가 나가기 무섭게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략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내려진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치적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지 않으며, 더구나 박정희의 처세, 변절의 궤적이 대통령으로서 존경할 만한 것이 못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경제 형성의 장본인을 기념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역사의식을 우롱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찬성론에서 있는 경우 그 주된 논리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거나, 그나마 이정도 살게 된 것이 경제개발 덕분 아닌가 하는 이유가 주를 이룬다. 처음 일부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들어 찬성론을 펴기도 하였지만 역시 논리 가운데도 기념관으로서가 아니라 공과를 함께 볼 수 있는 '역사법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자료관이 적절한 것임을 제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원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 역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래놓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 현장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예의 그 무관심, 언제부터인가만 연던 국민일반의 기억상실증을 언론과 정부, 국회가 이번에도 한껏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수한 희생을 치르고 겨우 찾게된 우리 현대사의 진실이 또다시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권이든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표상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존중하고 진작시키는가, 더 중요하게는 과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 위에서 앞으로의 사회발전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귀착된다. 역사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중세 역사상 전 왕대에 대한 체계적 평가로는 고려 6대 임금 성종에게 제시한 최승로의 오조정적평(五朝政績評)이 처음이다. 이는 성종 이전 다섯 왕의 정치력을 유교정치사상의 기준에서 비판한 것으로서, 창업주 태조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여 전왕대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정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몇몇 평가 역시 역사적 안목에서 현 사회의 진행 방향을 제시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으며, 사회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륜과 깊이를 보여 주었다.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하는 지금 우리는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그 폭과 깊이는 과연 어떠한 수준에 있는 것일까.

지난 80년대 말, 87년 민주화운동의 유산(流産)이란 기막힌 현실에 고뇌하면서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읊은 적이 있다. "우금치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가 세웠고/ 황토현 녹두장군 기념관은 전두환이 세웠으니/ 광주항쟁 시민군 위령탑은/ 또 어떤 자가 세울 것인가



“.../아아 기막힌 대조법이며/모진 갈등이며” 대한민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까지 이른 마당에 더 이상 이와 같은 기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겠으나 차운(借韻)하여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갈등을 느낀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놓은 국회가/ 4월 혁명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기념한다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데 거수기가 된다고 하는구나/... / 쿠데타로 정권잡은 박정희 기념관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세운다고 하니/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은 또 어떤 자가 세울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꺼이 존경하고 기념하고 싶은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어설픈 기념관을 건립하여 겪게될 곤란은 누가 감당하려 하는가. 지금은 기념관이 급한 때가 아니다. 국회를 기다릴 것 없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 공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잘 운용하는 일이다. 관련 법규를 보다 확충하여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 기념관을 가질 자격이 생길 것이다.

김인걸(서울대, 국사학)

# 넷

## 사회단체 성명서



1. 사회단체 성명서

2. 박정희 년표



## 1. 사회단체 성명서 모음

### 썩은 역사를 무너뜨리며

#### - 우리는 왜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는가 -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 5월 역사적 화해 운운하면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들고 나왔을 때, 전국 역사학자와 교사들을 비롯한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다수는 충격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 기념관 부지로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서울시 상암동이 결정되면서 또 한번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자는 것인가. 나라 없던 시절, 만주로 시베리아로 풍찬노숙하며 청춘을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를 기념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이승만 독재에 맞서 코흘리개 학생까지 거리로 나서 피로 일군 4.19 혁명을 총칼로 짓눌러 버린 군사 반란자요 민주헌정 유린자를 기념하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유신선포로 영구집권을 꿈꾸며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고혈을 짜내고 민주인사들을 살인, 고문한 독재자를 기념하자는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과 박정희 추종자들은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 정녕 모른다 말인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가 남겨놓은 모든 부정적 유산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고 상식마저 파괴하고 있다.

저들은 독립운동가와 독립군 토벌장교를 동시에 기념하자고 한다. 또 저들은 민주인사와 독재자를 동시에 기념하자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기념관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가.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자 희생자라 자처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역사적 화해를 하라는 위임을 받았단 말인가. 화해를 하려거든 조용히 개인 자격으로 동작동에 가서 무릎을 꿇든, 눈물을 흘리든 하라. 우리에게 결코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지금은 화해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했는데 친일파는 큰소리 치는 사회가 변하기 전에는, 민주인사들은 언제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모르고 독재의 하수인들은 아직도 권력의 요직에서 버젓이 행세하는 사회가 변하기 전에는, 노동자·농민들은 혹독한 노동에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농가부채의 이자도 못 갚는데 재벌과 그 2세 3세들은 고통없이 오늘도 외제차를 굴리며 거들먹거리는 사회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박정희와 화해할 수 없다.



박정희는 기념의 대상이 아닌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죽은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박정희의 총건 노릇을 하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저지하려는 우리들의 결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늘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이러한 결의의 일단을 보이기 위함이며, 아직도 이 사회가 양심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2000년 11월 5일  
민족문제 연구소,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지부, 서부지구총학생회연합, 인터넷 대자보,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이상 가나다순)

[전국연합]

**박정희 숭상을 중단하라!**

**국민을 모독하고 민족을 모욕하는 박정희 숭상을 당장 중단하라!**

- 박정희 흉상 철거 탄압 항의 논평

1. 박정희 흉상을 철거한 이유로 4월 혁명회 광태영 회장을 구속하고 민족문제연구소 김용삼 운영위원장과 방학진 조직부장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자들을 수배하는 등 박정희 흉상 철거 투쟁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정부 당국을 향해 우리는 치솟는 분노와 들끓는 항의를 보낸다.
2.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박정희는 일본 제국주의 장교다. 그는 자기 한 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겨레를 철저히 배반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박정희는 군사독재자다. 그는 자기 한 몸의 안녕과 쾌락을 위하여 민주를 잔혹하게 짓밟았다. 그리하여 그는, 이미 20여 년 전 온 민중의 항쟁에 의해 역사적으로 단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흉상이, 그것도 그자가 쿠데타의 총칼을 치켜든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국민의 부끄러움이다. 따라서 박정희 흉상 철거는 민족의 뜻과 국민의 지향을 현실에 옮기는 정당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3. 그러나 오늘, 정부 당국은 그 역사적 과제를 수행한 국민의 대표를 향해 광폭한 탄압을 휘두르고 있다. 독립운동가 학살을 직업으로 삼았던 자, 민중수탈과 민주파괴를 일과로 여기던 자의 흉상 철거를 탄압하는 일은 곧바로 박정희의 반민족, 반민주 행위를 숭상하는 일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부 당국에 강력 지적한다.
4. 더불어 우리는, 이번 탄압을 통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에 분명히 알린다.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은 몇 사람의 바람이나 몇 단체의 요구가 아니다. 그 운동은 민족을 귀하게 여기고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바탕 한다. 그러므로 탄압은, 타오르는 박정희 기념관 반대 운동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더욱 뚜렷이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5. 우리는 구속한 4월 혁명회 광태영 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탄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을 모독하고 민족을 모욕하는 박정희 숭상을 계속하는 한 국민과 겨레의 원성은 더욱 거대해 질 것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정부 당국에 경고한다.

2000년 11월 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문의 : 사무실 845-0615 / 장대현 011-9707-5435 / 강형구 011-9942-2890)



##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민교협·학단협 성명서

- 전국교수 서명을 시작하면서

최근 박정희 기념관 건립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작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화합의 계기' 운운하며 박정희기념사업회에 예산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이 계획은 마침내 상암동 신도시 중심지에 14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평화의 공원 내에 5000평규모의 대지를 서울시로부터 기증받고 700억원의 예산 중 정부지원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억원을 국민모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0월 '박정희 기념관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역사학자모임'이 토론회를 통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역사학자모임'은 기념관 건립의 정당성문제, 박정희 기념관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짓는점, '동서화합'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 등을 지적하면서 박정희기념관건립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대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청와대와 서울시장의 지원아래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참여연대 등 7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올바른 역사만들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기념관 건립부지를 제공 하는 서울시장 및 관계자의 반성과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중단, '대통령역사자료관'을 건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이 시민사회의 여론을 묵살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4·19혁명과 민주화운동을 압살한 유신독재의 주역인 박정희를 기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현 정권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일련의 시도들은 순수한 기념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주의적 구도에 편승하는 정략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부터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현실정치의 정략적 의도를 위해 반역사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계승해야 할 것'과 '비판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역사 속에서 어렵사리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당한 수많은 민주인사 및 단체들에 대해 커다란 반역사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나날 수 없다. 우리 독

재 잔존세력과 결탁하거나 박정희 유신독재 유령을 되살리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반역사적인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전국교수서명'을 시작하고자 하며, 지금이라도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과 서울시의 부지제공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 및 대안 제시에 공식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우리는 역사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기록으로서 보여주는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00년 8월 3일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서 있던 박정희의 흉상철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1. 우리는 지난 11월 5일(일요일), 전국적으로 4곳에 세워져 있는 박정희의 흉상 가운데, 서울 문래 공원에 세워져 있는 박정희의 흉상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섯 개 단체의 회원들에 의해서 철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였다.
2. 박정희는 누구인가. 박정희로부터 어떠한 은전도 입지 않은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  
박정희는 5. 16 군사 쿠데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압살한 장본인이다. 유신독재때에는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 투옥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독재자였다.  
일제하에서는 관동군 장교로서 애국 독립운동가들의 학살에 앞장서서 날뛰었던 일제의 사냥개였다는 것 또한 만천하가 아는 사실 아닌가.
3.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박정희에 대한 개인적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박정희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는 데에 어찌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한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박정희 추모사업회의 명예회장직을 내놓고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한 정략적 시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국민의 혈세를 200억원이나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4. 서울 문래공원에 서있던 5. 16 기념 박정희 흉상 철거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자 하는 이 땅의 양심세력과 전국민적 행동의 출발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 지역 양심인들의 뜻을 모아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200억원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저지하는데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0년 11월 6일

**박정희기념관건립저지 광주·전남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한봉)**

(전화:062-527-4501 집행위원장:정용화(016-688-0730), 사무국장:조진태(017 620-2703))

**5. 16 군사쿠데타 기념 박정희 흉상철거는 강도상해가 아닌 민족과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11월 6일 11시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이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의장 곽태영 선생(4. 19혁명동지회 회장)을 연행하고 박정희 흉상 철거 참가자들을 수배 한 데 대해 분노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래동 공원의 박정희 흉상은 5. 16군사쿠데타의 상징물이다. 독립군을 토벌하던 만주군 장교가 4. 19 민주혁명을 쓰러뜨리고 군사쿠데타를 모의한 반역의 역사현장이다. 그것이 어찌 민주시민의 광장에 기념물로 버젓이 수십 년의 세월동안 자리잡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민족반역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해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200억원의 혈세를 뿜아내어 박정희기념관을 짓는 데 앞장서는 기막힌 현실을 보라!

우리는 경찰이 박정희흉상을 철거하는 데 앞장선 동지들을 강도상해죄라는 흉악범으로 몰아 구속을 감행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

나아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앞다투어 낸 성명에서 그들 스스로 밝힌 것 처럼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겨야 한다면 이번 사건도 명백히 역사의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아니면 스스로 역사의 평가를 운운하면서 국민의 혈세 200억을 쏟아 부어 박정희 기념관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강도상해죄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동지들은 동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다. 썩어빠진 역사를 허물어뜨리고 건강한 역사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 민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의로운 투쟁을 단행한 우리의 동지들을 적극 지지하며

반민족 반민주의 상징 박정희 기념관이 저지되고 역사정의를 실현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0년 11월 7일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 국민적 합의 없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 국고지원을 반대한다

1. 참여연대는 박정희 흉상 철거 문제로 관련자 1명이 연행되고, 다른 관련자 2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2. 민족문제연구소, 홍익대민주동맹, 인터넷신문 대자보, 서울서부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서대문·은평·마포 지구당) 5개 기관 및 단체가 11월 5일, 서울 문래 공원에 설치된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였고, 이에 대해 당국은 박정희 흉상철거관련자들에 대하여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3. 참여연대는 박정희 흉상 철거 사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에 정부가 국민적 합의나 여론 수렴 없이 2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에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군 장교 출신이며,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켰고, 장기집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을 맡으면서까지 기념관 건립에 앞장서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정희 흉상 철거에 직접 참가한 단체들을 포함하여 24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국민연대를 만들어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국민적 합의나 여론 수렴 없이 국민의 혈세로 무리하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 11. 7.

### 참여연대

(담당 : 박영선 기획실장, 홍석인 : 723-4250 sihong@pspd.org)

## 더러운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사를 바로 세우자!

지난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원에 있던 박정희의 흉상이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일장기를 목에 걸고 두 개의 별이 달린 모자를 쓴 군인의 흉상이 바다에 내동댕이쳐질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흥분을 느꼈다. 비로소 더러운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실천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청년 시절에는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선발되었던 충직한 황국신민이었고, 장년 시절에는 4. 19 민주혁명의 함성을 군함발로 짓밟은 쿠데타의 주역이자 전대미문의 독재를 자행한 독재자였던 박정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더러운 역사의 잔재를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흉상을 철거시킨 행위에 대해 지방재정법이니, 공무집행방해니, 강도상해니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하여 곽태영(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용삼(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조직부장), 이중기(홍익민주동맹 사무국장) 등 의거를 행한 당사자 4명을 구속 또는 연행한 것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이다. 친일파를 옹호하는 자는 곧 친일파요, 독재자를 옹호하는 자는 곧 독재자의 하수인이 아니던가!

박정희 기념사업 정부지원 반대를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박정희 흉상을 철거한 일이야말로 민족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흉상 철거에 앞장선 4명에 대한 구속, 연행을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경북지역에 존재하는 친일파, 독재자 박정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2000년 11월 8일

### 박정희 기념사업 정부지원 반대를 위한

###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 민족반역자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개탄한다.

### 박정희 흉상 철거와 기념관 건립에 대한 독립운동가 22인 선언

우리는 최근 정부와 박정희 추종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 아연 분노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는 누구인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젊은 시절 일제와 맞서 싸울 때 박정희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일본제국주의의 선봉대였다. 해방 후 이승만은 오로지 권력욕에 사로잡혀 친일파를 육성 비호했다. 이승만의 비호 아래 친일세력은 우리 사회의 요소 요소에서 권력을 장악해 마침내 신생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와 역사의 정의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4·19민주주의 혁명의 싹을 군화발로 짓밟고 등장한 것이 5·16쿠데타였다.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결과 일본군 장교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일본 파시즘에 물들어 있던 박정희 군사정권이 갈 길은 오직 하나 전무후무한 유신독재였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참혹한 고문과 탄압 속에 쓰러져 갔다. 이런 박정희를 도대체 어떻게 기념할 수 있단 말인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제국주의 장교였다는 것만 해도 역사의 치욕일진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박정희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데에는 분노를 넘어 치욕을 누를 길 없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은 친일파이자 독재자로 일관한 박정희의 일생과 그의 가치관을 21세기 민족의 가치관으로 인정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반민족행위와 독재를 민족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우고 기념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이러한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박정희흉상을 철거한 젊은이들을 강도상해, 기물손괴죄로 잡아 가두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문래동 공원의 박정희흉상은 군사쿠데타를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쿠데타 자체가 불법인데, 쿠데타가 성공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찌 민주시민의 공원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썩은 역사를 무너뜨리고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앞장선 젊은이들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잡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젊은 시절 오로지 조국의 자주독립만 바라며 목숨을 걸고 투쟁해 온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오늘 이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파가 민족의 영웅으로 기념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목숨을 바쳤단 말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조국의 현실을 보고 구천에서 순국선열들이 통곡하고 제실 것을 생각하니 오로지 눈물만 앞을 가릴 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도 즉각 막아야 한다. 그리고 죄없는 젊은이들을 즉각 석방하기를 촉구한다.

2000년 11월 9일

김성권, 김은석, 조문기 (이상 건국훈장 애국장),  
강수원, 고광돈, 고종훈, 김봉현, 김채룡, 박문, 박준황, 박상유, 오용수,  
윤규섭, 윤석진, 이대성, 이일남, 이종식, 이준호, 위계룡, 지민중,  
최도균, 황갑수 (이상 건국훈장 애족장)



### 박정희 기념관 세우지 말아야

1. 정부는 참된 역사인식에 재를 뿌리고 훗날 천덕꾸러기가 될 게 뻔한 박정희 기념관 따위를 세우려는 계획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박정희 기념관을 지으려는 속뜻은 역사의 인물을 기리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재집권 전략 궁리 끝에 나온 책략의 성격이 짙다. 이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참된 역사 인물인가 아닌가 보다 오 늘 김대중 정권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기준으로 역사를 제물 삼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천박한 역사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잡는 일본군 장교에서 시작해 '좌익을 팔아먹은 좌익' 이었다는 설까지 접친 군인 시절을 거쳐, 4. 19 민주혁명을 군사 쿠데타로 뒤집고 고문과 학살로 얼룩진 유신장기독재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에는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밀고 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의 이해타산을 기준으로 역사를 '요리하려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후손 대 대로 특특히 대가를 치르게 될 행동이다.

2. 또 다시 실업대란의 광풍이 부는 거리에 사회 안전망 조차 없는 이 나라에서 실업자 신세가 돼 떠 돌아야 하는 노동자들 귀에 200억이나 돈을 퍼부어 독재자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정부 방침은 어떤 식으로 들릴까. 김대중 정권은 왜 실업예산이나 사회보장 예산은 눈에 불을 켜고 깎으면서 이런 영 똥한 일에 국민의 피땀을 쓰려 하나. 따지고 보면 박정희 정권은 한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재벌 경제과 종속경제를 키운 장본인인데, 오늘 이 땅 노동자와 서민들이 그 피해를 이토록 엄청난 고통으로 감수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까지 쏟아 부어 박정희를 기념해야 한단 말인가.

3. 며칠 전 뜻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 동상 목에 밧줄을 걸어 쓰러뜨린 데 이어, 오늘은 독립유공자들이 국가훈장을 반납하고, 독립군 사냥꾼인 일본군 장교 박정희 기념관을 지으려거든 독립유공자 목을 먼저 치라고 울부짖고 나섰다. 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 데도 정부는 역사와 여론을 거스르며 동상을 철거한 양심 있는 인사들을 강도상해라는 말도 안 되는 죄 목을 뒤집어 씌워 셋씩이나 구속하고 기념관을 지으려 하고 있다. 전태일 관련 조형물을 청계천 평화시 장에 세우자니 현대사 인물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며 냉정하게 내치던 서울시가 똑같은 현대사 인물이자 역사의 죄인 취급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데도 박정희 기념관 세우는데 맞장구 치는 것도 한심하기 짝 이 없다. 박정희 기념관 짓지 말라. 정권연장에는 혹시 조금 도움이 될 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에 대한 크나 큰 범죄로 남을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정희 흉상과 함께 박정희기념관도 철거해야 한다.

지난 5일, 서울 문래공원에 세워진 박정희의 흉상을 시민단체회원들이 철거한 일을 두고 일부 정치세력 이 "역사왜곡"이라고 반발하고, 경찰이 이를 강도상해혐의로 수사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가 아직 요원함을 절감하며, 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래공원에 세워진 박정희의 흉상은 5. 16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홍익대학의 한 미 술교수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쿠데타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한국이 정말 민주 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민주적 헌정질서를 탕크로 짓밟고 정권을 탈취한 장본인의 상징물부터 철거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까지 박정희 흉상이 건재해 있었을 뿐 아니라 박정희기념관을 짓는 데 국비를 대준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웃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정희 흉상의 철거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보다 못해 나선 것이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뒤늦게 했다는 만시지탄이 앞설 뿐 너무나 당연하고 떳떳한 일이다.

경찰이 이를 '강도상해'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씌워 범죄시킨다면 이는 현 경찰조직이 과거 군부 정권의 하수인으로 반민주행위를 일삼던 시대와 똑같은 반민주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일부 정치세력에게 묻는다. 박정희가 총칼로 민주헌정질서를 짓밟은 행위가 역사왜곡인가? 반민주 적 행위의 상징물을 철거한 것이 역사왜곡인가? 초등학교도 아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거부하는 정치세력 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박정희 흉상철거는 민주주의를 신봉하 는 세력이라면 반대할 수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왜 지금까지 그토록 민주주의를 주문처럼 외던 역대 정 부가 그것을 방치해두었는지를 엄중히 따져야 할 사안이다.

흉상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도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

박정희가 남긴 친일, 반민주, 인권탄압, 독재의 유산을 기념할 수는 없다.

박정희를 기념하자는 세력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치적인 경제성장의 신화도 터무니없는 허구이다. 경제 성장의 주역은 당시 피땀흘려 일한 민중들이지 그들의 고통 위에서 부패나 일삼던 권력집단이나 재벌이 아니다.

더구나 박정희식 재벌중심 불균형성장모델은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 기형성을 낳아 IMF실태통치를 불러오고 한국경제의 만성병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죽은 박정희가 지금도 살아있는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고통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진정 민주화하려면 박정희의 통치가 남긴 유산, 특히 경제적 유산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은 오늘날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왜곡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세력은 중대한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박정희기념관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박정희기념사업과 민주항쟁기념사업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 11월 9일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불교측에서 본다면 불교를 수호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인권차원의 문제에서 본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인권을 가장 잔인하게 탄압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 불교인들이 추앙하였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이 자리에서 나열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인권을 무시한 대통령을 우리는 왜 그토록 추앙하지 안으면 아니 되었는가 수많은 민주인사 통일인사들을 무시무시한 악법으로 인권을 억압하고 법을 악용하여 사형을 집행한 잔인한 대통령이었던 분을.

우리들은 이제라도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대해야 한다. 우리민족이 아직 그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서 보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대통령을 존경하는 나라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본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인권을 탄압한 대통령을 추앙한 나라는 없다. 만일 기념관이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인권을 무시한 자의 기념관이나 독재자의 동상을 세워 한다. 박정희 기념관을 이름하여 군부독재자 인권을 무시한 인권 억압자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의 기념관이라고 말이다.

얼마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박정희 동상을 철거한 일을 행한 사건이다. 그곳에 박정희 동상이 있다는 것은 박정희 추종자들이나 알았을까 국민들 중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진실로 추앙 받을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곳에 세워서야 되겠는가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 자랑스럽게 광화문이나 대학로 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후미진 곳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 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당시의 집결장소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었다면 너무나도 슬픈 과거의 역사다. 만일 그 당시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조국통일과 민주화는 앞당겨졌을 것이며 그리하여 인권탄압과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악법에 의하여 구속 사형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집권 18년 동안 우리 민족의 비극인 3선 개헌을 통해서 인권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어이하여 잊으려 하나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박정희

를 추종한 자들은 이 기회에 반성하기를 바란다. 아직도 도처에서 박정희를 추종한 종교 세력들은 그날을 회상하며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분노한다. 아직도 박정희를 추종한 자들이 부끄럽지 않는가 인간에 대한 역사를 속일 수는 있어도 인간 자신이 잘못 행한 역사는 속일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박정희를 추종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권력을 빙자하여 지금도 자신들의 죄업을 속이기 위하여 권력에 아첨하고 있다. 아니 자신들의 행한 죄를 속이려고 민주화에 동참하는 양 자기 자신들 죄업을 속이기 위하여 민주화에 동참하며 급전을 뿌리고 사회단체에 이름을 내밀고 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 부끄럽지 않는가. 그러한 인권을 탄압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그들은 반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런 간절함에 우리 불교인권위원회에서는 박정희 기념관에 대하여 반대하며 박정희 동상 철거는 당연하다고 본다.

#### 우리의 주장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니 기념관 건립을 반대한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 시 인권탄압을 행한 인권 탄압 자다.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동상이나 기념관을 반대하며 동상은 철거해야 한다.
- 박정희 동상을 철거한 민주인사 구속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석방해야 한다.

2000년 11월 9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 관 지원 한상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 관 지원 한상범



### 박정희 기념관 반대 동상 철거 민주인사 구속반대

우리 승려시인회에서는 박정희 기념관 설립을 반대한다. 박정희 동상을 철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시인의 양심으로 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많은 민주인사와 통일인사 시인들을 억압·탄압한 대통령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남북 7.4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도 그러한 선언을 완전 무시하는 역행을 저지른 대통령이었다.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죽음으로 갔던 지난날들을 우리 시인들은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는 민족을 배반하고 양심을 속이고 문학인을 짓밟은 잔인한 독재자이었다. 그는 역사속에서 영원히 문학인을 억압·탄압한 대통령이었다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군부독재자, 인권탄압자, 문인탄압자, 통일인사 사형자 등 이러한 인권을 억압·탄압한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승려시인들은 크게 반성하고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18년간이나 통치한 대통령에 대하여 시인의 양심으로 그를 비판하려 한다. 시인은 민족과 민중을 위하는 시인이어야 한다. 한편의 시로써 민족을 위하고 민중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시인의 눈으로 볼 때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인권을 억압·탄압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웠던 그 자리가 바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하여 군인들이 집결하였다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슬픈 역사이다. 당연히 그 자리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은 철거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중의 힘으로 철거되었다. 우리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민중의 힘으로 철거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오늘의 이 시대에 있어서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동상을 철거했다고 하여 구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은 올바른 전통과 역사를 지녀야 한다. 법은 진실로 법이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법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법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인간의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박정희 기념관은 중단되어야 하고 박정희 독재자 동상을 철거한 모든 애국 인사들은 석방해야 한다.

2000년 11월 9일

승려시인회 회장 : 진 관

### 5. 16 군사쿠데타 기념 박정희 흉상철거는 민족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다.

지난 11월 5일(일요일) 서울 문래 공원에 34년간 버젓이 서있던 박정희의 동상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뜻 있는 인사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박정희는 이승만 12년 독재를 무너뜨린 4·19민주혁명을 5.16군사쿠데타로 압살하여 민주주의의 싹을 없애고 18년간 철권통치로 온 사회를 공포분위기로 몰고 갔으며 유신독재 때는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 투옥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한국판 피노체트였다.

또한 일제 때 행한 그의 반민족행위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의 사냥개이자 독재의 화신인 박정희 동상이 우리가 사는 새 시대 21세기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동상철거로 역사의 양심을 세운 것에 대해 적극지지 한다.

우리는 씩어빠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투쟁을 한 인사들을 흉악범으로 몰아 잡아 가두는 처사에 분노하며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 운운하며 잘못된 역사청산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한 소수의 박정희 추종자들을 위해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국민의 혈세 200억을 쏟아 부었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박정희에 대한 개인적 화해와 용서는 관심조차 없다. 민족과 반민족, 민주와 독재, 통일과 반통일에서 언제나 반역의 편에 섰던 친일독재자에 대한 화해와 용서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합의한 바가 없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여 즉각 '박정희추모사업회명예회장직'을 내놓고 차기 선거용 정략적 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박정희는 기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한 이번 동상철거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천안지역에 박정희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42만 천안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0년 11월 10일

천안민주단체협의회 의장 양석진



## 대구 경북 윤리과 역사과 교사 100인 선언

-박정희를 국가가 기념한다면, 우리는 윤리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바른 윤리와 역사적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 교사들은 최근 박정희 기념관을 설립하고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과연 우리는 역사와 윤리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폐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군사문화, 외형적, 성과주의,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반인권적 관행, 끊어지지 않는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독재나 장기집권보다도 민족정기를 세우려 했던 반민특위를 해산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했던 그 일로 인하여 이후 우리의 현대사는 질곡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범죄를 다시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지난 50년 민주투쟁사의 정통성을 뒤엎고 제2의 박정희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 기념관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박정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념하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교사들은 박정희 기념관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민족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투신하던 그 때, 박정희교사는 출세를 위해 교단을 떠났습니다. 뜻있는 젊은이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 없다고 일제 학병에서 광복군으로 탈출하던 그 때,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는 제발로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한 후 우등으로 졸업하여 만주국 황제 부의 부의로부터 금시계와 왜국 육사 진학의 특전을 받았습니다.

장준하선생이 광복군에서 본토진입을 준비하던 그 때, 다카기 마사오는 왜국 육사를 마치고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열하지방에 배속되어 항일투사 토벌에 앞장섰습니다. 그에게 민족의 민족의 광복은 출세에 대한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윤리와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는 국가가 세운 그의 기념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광복 후 남조선 노동당의 군사총책으로 군에 침투하였다가 여순사건 직후 검거되어 사형직전에, 자신의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목숨을 건진 좌익군인 박정희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어설픈 좌익사상을 본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동료를 밀고한 그의 카멜레온 같은 적응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는 준법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총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찬탈한 국가변란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총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박정희는 구데타이후 중앙정보부라는 비밀경찰을 창설하고,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는 것은 체포 구금하는 것은 물론 공공연히 고문을 자행하였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자행하였습니다. 그의 독재에 항거하는 사람중에는 잡자기 사라져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끌려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적인 기자, 양심적인 판사, 양심적인 공무원은 모두 직장에서 쫓겨 났습니다. 계엄령과 위수령, 비상사태와 긴급조치로 이어졌던, 그가 통치한 시대는 나라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3선개헌과 유신구데타를 저질렀습니다. 유정회를 만들어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뽑았습니다.

그는 권좌를 놓지 않고 황제로 군림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박정희에 대해서 국가가 기념관을 세운다면 그 동안 민주회복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시민과 학생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우리는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능률과 실질의 승상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유보될 수 있고, 인권은 억압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청렴함과 결백함, 공정함과 평등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시대는 부정과 부패의 시대였습니다. 정경유착이 뿌리를 박기 시작했고, 그와 결탁한 자들은 엄청난 특혜 속에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박정희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과 부패의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찬양하는 기념관은 국가가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박정희가 만든 또 하나의 비극적 신화는 외형적 성장 제일주의입니다. '하면된다'는 군대식 구호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해도 안 되는 일은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야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적인 부실공사로 건설비의 몇 배나 되는 보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빨리 빨리'는 와우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제성장을 이유로 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전태일일사는 '법을 지키라고 분신을 했고, 인간적 대우를 요구했던 동일방직의 여공들에게는 분노가 퍼부어졌습니다. 이런 박정희식 경제발전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어떠한도 상관없다거나,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박정희가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면, 세계적인 독재자들도 측근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분'이었고,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덕목에 대해서 국가가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찬양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박정희를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그의 기념관을 짓는다면, 수많은 다리와 철도를 건설하고, 신작로를 뚫었으며, 전봇대를 세웠던 왜정시대 총독들의 기념관도 함께 지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남긴 경제적 유산은 엄청난 외국 빚과 재벌에 의한 경제독점,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왜곡된 경제구조였습니다. 아우토반을 뚫고 군수산업을 발전시켰던 히틀러를 독일산업을 부흥자로 부르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는 박정희를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특히, 박정희는 교사와 교육을 능욕하였습니다. 5. 16 군사정변 이후 제일 먼저 교원노조를 탄압하였던 그는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교사들을 동원하였습니다. '10월유신은 김 유신과 같아서'라는 식의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론'을 복도에 액자로 게시하고,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을 따로 모셔 놓아야 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웠던 일은 교사들에게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유신헌법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도록 했던 일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은 모두 왜곡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사를 정권의 나팔수로 내몰았던 박정희를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건립한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박정희는 기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투쟁입니다. 국가가 우선 세워야 하는 것은 민주화 기념관입니다. 국가가 우선 힘써야 하는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가 남긴 비민주적 관행과 군사문화적 폐해를 찾아내어 고치는 일입니다. 아울러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와 같은 군사독재시대에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의 진상을 밝혀 내는 일입니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파시즘의 망령이 횡행하고 있음은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추모하고 일본에서도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제잔재와 군사독재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는 일제와 군사독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바른 미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 기념관 기부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국민연대 논평

-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 !!!

2000년 11월 21일 오전, 대한민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을 위한 500억원의 국민모금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불과 며칠 전에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5·16군사 쿠데타 주역 박정희 육군소장의 동상을 철거하면서 보여준 강력한 항의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성명을 무시하고, 특히 지난주 인터넷 언론사와 가진 국회 예결위원들의 인터뷰에서 29명의 예결위원들이 국고지원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오전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위한 500억원의 모금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제하 독립운동의 현장을 지키셨던 22명의 애국지사들의 엄중한 경고도 무시한 채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와 반대의견이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듣기는커녕 앞장서서 500억을 모금하겠다고 나서는 저의는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오늘 독재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략적 술수로 역사를 왜곡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 혈세 200억을 빼앗고 이제 앞장서서 500억을 국민들에게 건어들이겠다는 이 행태는 역대 독재자들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노벨평화상을 반납하여 노벨상의 권위를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발 뚝뚝하게 전 국민 앞에 공청회라도 열고 여론을 수렴해서 자신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바란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서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간단한 회의절차로 강탈해 가는 강도행위는 대통령의 권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일이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은 제발 더 이상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길 진심으로 바란다.

11월 11일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 박정희 기념관에 우리 세금을 낼 수 없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방침이 알려진 후 각계각층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고지원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모든 정치권이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몰두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회피하는 등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치현실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과거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했던 각 당의 재야출신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는 비록 박정희의 개인적 삶은 물론, 장기집권을 통해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독재자였다고 본다. 우리는 그의 재임 시기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한 시대의 역사는 결코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그 질적인 내용과 후세에 미친 영향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화의 진전을 통하여 평가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박정희를 추모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 이상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박정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기념관을 지어야 할 만큼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느냐에 있다. 아직도 역사적 평가나 국민적 합의가 명확히 내려지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그의 치하에 고통과 억압을 당한 당사자들이 남아 있고 그가 남긴 유산으로 사회적 모순이 곳곳에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기념관 건립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선심성 정치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전 국민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7백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1년에 5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낙담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고를 지원하여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는 적어도 죽은 지 50년이 흘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룩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박정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마저 기념관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다. 게다가 사후 50년이 흘러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백범 김구선생의 기념관 건립이 민간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고지원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하였을 때 이승만은 물론,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각기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대

통령이 먼저 나서게 되면 뒤따를 민간모금이 준조세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 추대에 대하여 사양하지 않은 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의 장악과 유지가 생명인 정치인이 정략적 차원으로 내린 역사적 재평가는 정권의 주체가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은 역사학자들이 객관적 검증과 연구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국현대사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고 그 중 일부를 박정희 관련시설로 만들자는 역사학계의 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률은 현직 대통령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미비점들을 보완한다면 이를 통해 박정희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관련기록들이 자의적으로 보관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대통령들이 의식하게 되었을 때 권력의 행사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같은 합리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추대를 공개적으로 거절하라.
1. 정부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라.
1. 국회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예산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
1. 국회는 박정희 기념사업회 경상경비 지원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
1. 정치권은 총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
1. 법률을 정비하여 공공적인 "역대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라.
1.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건립하라.

1999년 11월 30일

##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 박정희 관련 참고 문헌

- 강민숙, 1998, 『박정희』 여명미디어(주)(구)여명출판사
- 김교식, 1990, 『다큐멘터리 박정희(1-4)』, 평민사
- 김대환, 1993, 「박정희 경제 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1호, 1993년 여름호
- 김민배, 1997, 「법체계를 통해 본 박정희 유신정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37호, 1997년 여름호
- 김석야, 1997, 『박정희와 김종필』, 사공구
- 김성환·김정원 외, 1984, 『1960년대』 (서울 : 거름)
- 金潤根, 1996, 『박정희 군사정권 탄생(朴正熙軍事政權의誕生) : 한국현대사의 원점(韓國現代史の原点)』, 彩流社
- 김일영, 「박정희체제 18년, 어떻게 볼 것인가」 『계간 사상』, (1995. 겨울)
- 김재홍, 1998, 『박정희의 유산』, 푸른숲
- 김재홍,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 쏙늬음』, (동아일보사, 1994), p. 327.
- 김정림, 1997, 『아 박정희』, 중앙일보사
- 김정원, 1984, 「군정과 제3공화국 : 1961-1971」 김성환·김정원 외 지음, 『1960년대』 서울 : 거름
- 김종신, 1997, 『박정희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 한국논단
- 김종호, 2000, 『희망을 심어준 대통령 박정희』, 아이세상
- 金璉, 梁泰昊 譯, 1993, 『박정희 시대』, 亞紀書房
- 김진균, 1991, 「5·16군사 쿠데타의 정치문화적 의미」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12호, 1991년 봄호
- 김태형, 1997, 『영웅 박정희』, 인화
- 金炯旭, 朴思越, 1985, 『金炯旭 회고록』, 1-3, 아침
- 盧在賢, 1993, 『청와대(靑瓦臺)비서실 : 육성(肉聲)으로 들어본 3공(共)에서 5공(共)으로 이어지는 정치 권력 비사(秘史)』, 중앙일보사
- 문명자, 1999,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월간 말
-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편, 서울대학교 한미관계연구회편, 1986, 『플레이저보고서 :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 (서울 : 실천문학사)
- 박 실, 『박정희대통령과미국대사관』, 백양출판사

- 박세길, 1993, 「인간 박정희 변절과 권력욕의 화신」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1호, 1993년 여름호
- 朴正熙, 1963, 『국가(國家)와 혁명(革命)과 나』, 향문사
- 박찬용, 1993, 『박정희독재 전두환독재』, 신지평
- 박찬용, 1996, 『박정희 전두환의난1 1970년-1982년』, 아우내
- 손호철, 1991, 「5·16쿠데타의 재조명」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서울 : 풀빛)
- 손호철, 1993, 「박정권의 정치체제적 성격-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3호, 1993년 겨울호
- 손호철, 1995, 「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서울 : 셋길)
- 신범식 편, 1969, 『박정희대통령선집』, 1-6, 지문각
- 신용구, 2000, 『박정희 정신분석 신화는 없다』, 뜨인돌출판사
- 양성철, 1992, 『박정희와 김일성』, 한울
- 역사문제연구소, 1992, 『한국 현대사의 라이벌』, 역사비평사
- 이경재, 「박대통령이 보낸 백만 달러의 행방」 『신동아』, (1988. 2)
- 이도성, 1995, 『박정희와 한일회담』, 한국출판협동조합
- 이상우, 1986, 『박정권 18년 : 그 권력의 내막』, 동아일보사
- 이상우, 1986, 『(秘錄)朴正熙 時代』 1-3, 증원문화
- 이상우, 1993, 『박정희, 파멸의 정치공작』, 동아일보사
- 이영호, 『박정희 대통령』, 집문당
-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 정상호,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1961-1979)」 『정치비평』 창간호(1996. 12)
- 정운현, 1993,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1호, 1993년 여름호
- 정재경, 『박정희 사상 서설』, 집문당
- 정재경, 1994, 『박정희 실기』, 집문당
- 정재경, 1992, 『위인 박정희』, 집문당
- 정해구 1997 「박정희 정권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38호 1997년 가을호
- 중앙일보특별취재팀, 1998, 「실록 박정희」, 중앙M & B
- 최 영, 1995, 『朴正熙의 사상과 행동』, 현음사
- 편집부, 1997, 『황태성과 박정희 김종필의 커넥션』, 고려글방
- 하신기, 1997, 『박정희-한국을 강국으로 이끈 대통령』, 세경사



한국정치연구회, 1998,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한미관계연구회 역, 『프레저 보고서』, (실천문학사.)  
 한병진, 「1970년대 국가와 농민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허수정, 1997,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신라출판사  
 현대사연구소, 1999, 『5. 16과 박정희 정부』, 조은문화사  
 후쿠다 쓰네히사리, 「고독한 사람 박정희」, 김성진 외 『박정희 시대 :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조선일보사, 1994)

『新東亞』, 79년 11월호 - 89년 12월 박정희 관련 기사목록  
 \_\_\_\_\_, 79년 12월 - 좌담회 : 사건으로 본 70년대 (김대중, 김중배, 박현태 송정숙 이규형 손세일) ; 김승용, 「충격의 10월 26일과 27일」  
 \_\_\_\_\_, 80년 1월 - 민병욱, 「긴급조치9호에 묶인 4년 7개월」  
 \_\_\_\_\_, 80년 2월 - 노경택, 김재규군재방청기 ; 10·26사태에서 12·12최대통령취임까지 충격과 위기의 55일간 : 강성재 김윤곤 등  
 \_\_\_\_\_, 82년 3월 - 미국이 본 5·16군사정권  
 \_\_\_\_\_, 82년 4월 - 마샬그린(당시 주한미대리대사), 20년만에 공개하는 4·19 - 5·16비화 (인터뷰)  
 \_\_\_\_\_, 82년 5월 - 양동안, 「장면총리와 박정희대통령」 ; 김원호, 「5·16주체들의 현주소」  
 \_\_\_\_\_, 83년 1월 - 이성춘, 「15만표의 드라마 - 박정희장군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_\_\_\_\_, 83년 5월 - 조용중, 「국가재건최고회의」  
 \_\_\_\_\_, 83년 7월 - 김원호, 「10월유신'전후」  
 \_\_\_\_\_, 83년 10월 - 김재춘, 「5·16혁명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_\_\_\_\_, 83년 11월 - 이상우, 「유신시대' 주역들의 현주소」 ; 송석하, 「5·16새벽의 육군본부」  
 \_\_\_\_\_, 83년 12월 - 이종태, 「5·16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 윤일웅, 「유신정권과 정의규현 사제단」  
 \_\_\_\_\_, 84년 1월 - 정대수, 「김종필과 4인체제」  
 \_\_\_\_\_, 84년 3월 - 이상우, 「긴급조치 - 그 발동과 도전」  
 \_\_\_\_\_, 84년 5월 - 방자명, 「우리는 5·16쿠데타저지에 실패했다」 ; 이영신, 「장도영실각, 육사5기와 8기의 갈등」  
 \_\_\_\_\_, 84년 7월 - 장도영, 「나는 박정희를 신임했다」 ; 이영신, 「황태성은 간첩인가 밀사인가」 ; 이상우, 「고독한 권력자, 그 감춰진 내면세계」  
 \_\_\_\_\_, 84년 8월 - 장도영, 「나의 '쿠데타가담설'은 조작이다」 ; 이상우, 「5·16이념'은 급조

되었다」 ; 이기동, 「일본제국군의 한국인장교들」  
 \_\_\_\_\_, 84년 9월 - 이상우, 「박정희는 용인의 천재였다」  
 \_\_\_\_\_, 84년 10월 - 장도영인터뷰 「나는 왜 평양에 갔었는가」 ; 「5·16 그날의 장도영과 윤보선·현석호」 ; 강인섭, 「YH사건에서 10·26사태까지」 ; 특집 : 10·26 5주년 유신체제를 평가한다 ; 이정복, 「절대권력에 숨죽인 민주주의」 ; 이상우, 「박정희와 미국, 그 막후의 전말」 ; 정일형(유고), 「왜 박정권의 한일회담을 반대했나」  
 \_\_\_\_\_, 85년 1월 - 강성재, 「박정희장군과 이종찬장군」 ; 이상우, 「박대통령의 막후인물들」  
 \_\_\_\_\_, 85년 2월 - 이상우, 「박정권하의 정치망명자들」 ; 강성재, 「박정희장군과 이종찬장군」 (중)  
 \_\_\_\_\_, 85년 3월 - 강성재, 「박정희장군과 이종찬장군」(3) ; 이상우, 「70년대의 반체제인권운동」  
 \_\_\_\_\_, 85년 4월 - 이상우, 「파멸로 끝난 박정권의 정치공작」 ; 강성재, 「박정희장군과 이종찬장군」(완)  
 \_\_\_\_\_, 85년 5월 - 김대곤, 「5·16에 항거한 장군들」 ; 이상우, 「박정의가의 영욕과 그 친척들」  
 \_\_\_\_\_, 85년 6월 - 강성재, 「박정권과 '지역감정」  
 \_\_\_\_\_, 85년 8월 - 이상우, 「박정권하의 사법부수난」  
 \_\_\_\_\_, 85년 9월 - 이상우, 「박정권, 대일편향의 내막」  
 \_\_\_\_\_, 85년 11월 - 이경재, 「박대통령과 10·2항명파동」  
 \_\_\_\_\_, 85년 12월 - 이경재, 「비상사태선언과 종신집권체제완성」 ; 이상우, 「박정권18년의 '어용교수'들」  
 \_\_\_\_\_, 86년 1월 - 이경재, 「야당분열드라마와 공작정치」  
 \_\_\_\_\_, 86년 2월 - 강성재, 「김형욱, 그 권력과 최후」(1)  
 \_\_\_\_\_, 86년 3월 - 이상우, 「10·26전야의 반체제운동」  
 \_\_\_\_\_, 86년 4월 - 이상우, 「유정희와 유신정치」 ; 강성재, 「박정권과 언론탄압」  
 \_\_\_\_\_, 86년 5월 - 신명순, 「5·16은 우리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 문명호, 「5·16쿠데타 진압좌절의 진상」(5·16당시 6군단장 김용수장군 인터뷰)  
 \_\_\_\_\_, 86년 10월 - 이상우, 「박정권하의 언론탄압」  
 \_\_\_\_\_, 86년 11월 - 강성재, 「박정희민정불참선언의 회오리」  
 \_\_\_\_\_, 86년 12월 - 강성재, 「박정희의 '변의'와 권력내부의 암투」  
 \_\_\_\_\_, 87년 1월 - 이상우, 「박정권하 권력형부패의 정체」 ; 강성재, 「박정희에게 언성높힌 '버거' 미대사」  
 \_\_\_\_\_, 87년 2월 - 강성재, 「군과 정치자금을 관여하지 마시오」(정일권회고-나와 박대통령1)



- \_\_\_\_\_ 87년 3월 - 강성재, 「대통령야심없으니 석방시켜주세요」 (정일권회고 - 나와 제3공화국2)
- \_\_\_\_\_ 87년 4월 - 강성재, 「김, 그사람 정부아픈데만 찢러」 (정일권회고 - 나와 제3공화국3)
- \_\_\_\_\_ 87년 5월 - 5·15당시 주한미대사관 문정관 그레고리 헨더스의 회고 : 김정기, 「'케네디' 5·16진압건의를 묵살」 ; 이상우, 「박정희론」 (영광과 비극의 통치자, 그 '집념'의 내면)
- \_\_\_\_\_ 87년 10월 - 이상우, 「박정희, 그 '컴플렉스의 정치학」
- \_\_\_\_\_ 89년 12월 - 김대중, 「그러나 역사가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 김영삼, 「민족정기를 위해 청산해야 할 시대」

##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 결사반대

국고지원을 유보하는 의원들에게 촉구를!  
 국고지원을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를!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격려를!

### 국회 예결위 의원명단과 각 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의원들입니다. 국고지원 반대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전화번호 국번은 784, FAX번호 국번은 788입니다. (민:민주당, 한:한나라당, 자:자민련)

- |                  |                                     |
|------------------|-------------------------------------|
| -김덕규(민/서울중랑을)    | new21@assembly.go.kr ☎ 5700 ☎ 3429  |
| -이원성(민/충북충주)     | ☎ 1726 ☎ 3743                       |
| -이해찬(민/서울관악을)    | ksd21c@assembly.go.kr ☎ 5717 ☎ 3616 |
| -권기술(한/울산울주)     | kisool@kisool.pe.kr ☎ 5036 ☎ 3716   |
| -민봉기(한/인천남갑)     | m9336@netian.com ☎ 3875 ☎ 3706      |
| -권오을(한/경북안동)     | koy@koy.or.kr ☎ 3877 ☎ 3317         |
| -신현대(한/경기수원권선)   | dongwoo7@netsgo.com ☎ 5363 ☎ 3821   |
| -김문수(한/경기부천시사)   | mskim@assembly.go.kr ☎ 1531 ☎ 3316  |
| -박세환(한/비례대표)     | parksh@assembly.go.kr ☎ 5021 ☎ 3630 |
| -정우택(자/충북진천괴산음성) | webmaster@wtc.or.kr ☎ 3288 ☎ 3303   |

###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의원들입니다.

고진부(민), 김경재(민), 김성순(민), 김영환(민), 송석찬(민), 송영길(민), 신계륜(민), 이상수(민), 유삼남(민), 송영진(민), 이호웅(민), 정철기(민), 함승희(민), 김용학(한), 김원웅(한), 김정숙(한), 김홍신(한), 손태인(한), 나오연(한), 심규철(한), 정형근(한)

###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을 찬성하는 의원들입니다.

정세균(민), 배기선(민), 신기남(민), 이근진(민), 유재규(민), 김용균(한), 이한구(한), 김용갑(한), 신영국(한), 박종근(한), 윤영탁(한), 이강두(한), 이재창(한), 정인봉(한), 황우여(한), 김학원(자), 이양희(자), 김용환(한국신당), 예결위원장인 장재식의원(민)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http://anti516.jinbo.net> ☎ 959-0715 ☎ 965-8879

\*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성금을 기대합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21-0982-730 주종환(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